

2020~2024

# 성과관리 전략계획

2020. 6.

국 토 교 통 부

2020~2024

성과관리 전략 계획

2020 · 6

국토교통부

2020~2024년도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전략계획, 2020.6.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044-201-3203, 3208)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555호



# 목 차

<b>I.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b> .....	<b>1</b>
1. 그간의 정책성과 .....	3
2. 향후 정책 추진방향 .....	5
<b>II.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b> .....	<b>23</b>
1. 국토교통부 일반 현황 .....	25
2. 성과관리 전략계획 개요 .....	30
<b>III. 세부 추진계획</b> .....	<b>33</b>
■ 전략목표 I.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한다. ....	35
I - 1. 지역경제를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한다. ....	42
I - 2. 지역균형발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	45
I - 3. 품격 있는 도시공간을 구현한다. ....	48
■ 전략목표 II.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혁신한다. ....	50
II - 1.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한다. ....	56
II - 2. 국토교통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산업을 혁신한다. ....	60

■ 전략목표Ⅲ.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	63
Ⅲ-1.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을 구축한다. ....	70
Ⅲ-2. 속도감 있는 서민 주거거점을 공급한다. ....	72
Ⅲ-3.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	74
■ 전략목표Ⅳ. 교통 시스템 혁신을 통해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든다. ....	77
Ⅳ-1. 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	86
Ⅳ-2. 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 ....	92
Ⅳ-3. 교통 플랫폼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을 구현한다. ....	97
■ 전략목표Ⅴ.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	102
Ⅴ-1. OECD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한다. ....	108
Ⅴ-2. 건설안전의 위협요인을 근절하고 생활환경 안전을 확보한다. ....	112





#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 1. 그간의 정책성과 ..... 3
- 2. 향후 정책 추진방향 ..... 5





## 1. 그간의 정책성과

-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18.5)」에 따라 창업공간 조성(131개), 신규 일자리 창출(10,989개), 교육·훈련생 양성(14,789명), 「로드맵 2.0」 발표(‘19.11)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스마트시티 장관회의 개최\* 및 부산 시범도시 착공(‘19.11), 수소경제 지원을 위한 충전소 확충(고속도로휴게소 8기 운영)
  -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6개국과 스마트시티 협력 MOU 체결, 232억원 수출계약 달성
- K-City 개방 확대(‘19.3), 레벨3 안전기준 마련(‘19.12), 스마트건설지원센터 확대(‘19.6), 드론특별법 제정(‘19.4)·실증도시(‘19.7, 2곳)·전용시험장(‘19.9, 3곳) 구축
- 284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총 800여개의 생활SOC사업 추진, 캠퍼스 혁신파크 선정(‘19.8, 3곳) 등 지역산업 혁신 추진
- 경찰청·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44년만에 역대 최저수준으로 감축(‘19.11, 3,025명), 철도 사고·항공 안전장애 수도 감소\*
  - \* (철도 사고) ‘18. 88건 → ‘19.10. 63건 / (항공 주요 안전장애) ‘18. 34건 → ‘19.12. 22건
-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대책(‘19.1)」,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19.6)」,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대책(‘19.7)」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 직접시공 확대(‘19.3), 등록기준 개편 및 임금직불제 의무화(공공공사, ‘19.6), 택시 사납금 폐지·월급제 도입(‘19.3), 화물차 안전운임 결정(‘19.12)
- 서울 청약당첨자 중 무주택자 비중(‘18. 94.4% → ‘19. 97.9%)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18. 16% → ‘19. 19%) 증가 등 실수요자 중심 시장 여건 조성
- 신혼희망타운(1만호), 기숙사형 청년주택(1천호), 고령자 복지주택(1.3천호) 등 차질없이 공급\*, 주거급여 상한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 ‘19년 공적주택 공급목표(20.5만호) 달성 및 장기공공임대 재고 확충(159.8만호, 7.6%)

\*\* 서울(1인가구) ‘19. 月 23.3만원 → ‘20. 月 26.6만원 / ‘18.12. 94만가구 → ‘19.11 103만가구

- 무주택 서민 26만 가구에 주택자금 저리 융자 지원, 층간소음 사후 성능 확인제도('19.4)를 통해 주택의 품질개선 유도
- 서울 집값 32주 연속 하락('18.11~'19.6), 분양가상한제 지정('19.11)·관계기관 집중점검('19.10~1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19.12)
-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확정(3차, '19.5) 후 13곳(15만호)은 지구지정 완료, 공시가격 현실화('19.1~4), 「'20년 공시가격 및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19.12)
- 광역교통 전담 조직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 설립('19.3), 중장기 광역교통 정책방향을 담은 「광역교통 2030」 선포('19.10)
- GTX-B 예타 통과 및 신안산선 착공('19.8), 김포도시철도 개통('19.9), 고속도로 1개(2.5km)·국도 25개(189km) 노선 개통, M버스 확충
- 천안논산, 구리포천 통행료 인하\*, 설·추석 통행료 면제, 대구부산, 서울춘천 인하 방안 마련,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확대('19.6)
  - \* 천안논산(9,400원→4,900원, △48%, '19.12), 구리포천(3,800원→3,600원, △5%, '19.1)
- 공공형 버스 지원제도 도입, 공공형 택시 확대\*, 휠체어버스 시범도입('19.10), 항공기 지연 감소 및 지방공항 국제선 확충
  - \* (공공형 택시) '18.12. 123만명 → '19.11, 194만명

## 2. 향후 정책 추진방향

### ①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제활력을 높이겠습니다.

#### 1.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 육성

#### ① 지역의 일자리 거점 조성

- 쇠퇴지역 내 주거·상업·산업기능이 융·복합된 경제거점 조성을 위해 공공주도의 **혁신지구**(천안·고양)·**총괄관리자사업**(인천·부산) 착수
  - \* ('20년 선정계획) 도시재생혁신지구(5곳), 총괄사업관리자 사업(10곳) 등
- 旣추진사업(284곳)도 내실있게 추진, 연내 약 300개의 **생활SOC** 공급
- 노후산단 내 휴·폐업부지 **고밀·복합개발**(산업단지 상상허브, 2곳), **산단·주변지역 연계 도시재생 뉴딜**(3곳) 등 **노후산단 재생 혁신** 착수
  -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과 연계하여 산단의 솔루션 개발·지원, 산단 재생사업을 통해 스마트 주차장 설치 등 **노후 산업SOC 스마트화**(‘20.11)
-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에 대해 지자체의 관리계획 수립 후 공기업 주도로 지원·기반시설 정비 및 **복합개발**(시범사업 5곳 착수, ‘20.9)

#### ② 첨단산업 거점 활성화

- 대학, 철도역사 등 지방 도심에 산업, 문화, 주거 등과 융·복합된 저렴한 기업입주공간을 조성하는 (가칭)**기업혁신특구** 도입(계획수립, ‘20.6)
  - **캠퍼스 혁신파크**(국토·중기·교육부), 창업·스케일업 지원(중기부) 등 관련 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규제 완화 및 세제·금융혜택 등 집중 지원
  - \*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착공(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신규사업 선정(‘20.12)
- **판교2벨리에 글로벌Biz센터**(100개社, ‘20.6 착공), **기업성장센터**(300개社 + 행복주택 195호, ‘20.11 착공)를 공급하여 **기업공간 확대** 및 주거 지원
  - \* (지방 도시첨단산단) 10곳에 창업·성장·소통교류 공간 등이 복합된 혁신성장센터 조성

### ③ 공항 중심 지역거점 개발

- 양양·청주·무안을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지정, 문체부·지자체와 함께 운수권 배분, 노선운영 인센티브 확대 등 **항공·관광 융복합사업** 지원
- 공항 중심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시개발과 지역 특화산업을 연계한 공항주변 개발계획** 마련(시범사업 1~2곳, '20.11)

## 2. 지역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 ① 균형발전 거점을 지역 경제거점으로 육성

- **혁신도시의 경제거점화**를 위해 기업입주공간 공급 등 **클러스터 활성화** 추진, **복합혁신센터**(7곳 착공, '20.5) 등 **생활인프라**도 확충
- **태양광 선도사업(0.1GW)·수변도시 조성사업** 착공('20.12), **투자진흥지구 도입** 등 **투자유치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20.11) **새만금 조성 본격화**
- **바이오·헬스 플랫폼 조성전략 수립**('20.9) 등 **행복도시 자족기능 강화**, **제주 의료서비스센터** 착공('20.5) 및 **제2첨단과기단지** 계획 수립('20.11)
- **민간활력 제고**를 위해 **역대 최고수준으로 재정 조기집행**('19. 54.9 → '20. 60% 목표), **지자체 협업강화** 등을 통해 **실집행도 역대 최대화**(55%)

### ② 국가 균형발전 인프라(예타면제 사업) 본격 착수

- **15개의 인프라 건설사업**(총사업비 21.7조원)에 대해 **턴키방식**(설계·시공 동시 발주), **기본 및 실시설계 통합**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동해선 단선 **전철화**(200억원),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113억원)부터 연내 착공

### ③ 지역 공항 운영 및 인프라 구축

- **제2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건설** 등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추진 ('24. 완료), **여객처리능력 제고**를 위해 **항공사 단계적 재배치**('20.11~)
- **김해 신공항**은 총리실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 조치, **제주 제2공항**은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흑산) 주요쟁점 보완, (백령) 중장기계획 반영('20.11), (울릉) 착공('20.6), (새만금) 기본계획 착수('20.6)

### 3. 품격있는 도시공간 구현

#### 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공간 관리

- **용산공원** 조성의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미군 장교숙소 등 **기반환부지 개방**(’20.7), 온전한 녹지축 조성을 위해 **공원경계 확장**(면적 26% 증)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응, 행위제한 완화 등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유도(’20.3), 난개발 우려지역은 **관리방안 마련**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지원반 운영, ’20.1), **해제불가 등급**(10년간) 신설, 항공사진·드론을 활용한 **단계적 관리체계 구축**(’20.9)

#### ② 도시가치를 높이는 건축 디자인 구현

-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위한 체계적 업무절차 기준 마련(’20.11), **총괄·공공건축가** 위촉 지원(’20.4), 설계자의 시공 참여 **활성화**(’20.8) 추진
- 한옥 신기술 공공건축 시범 적용(3곳), 우수 교육기관 지정기준 마련(’20.10), 한옥설계 자동화프로그램 보급(’20.11) 등 **한옥 건축 확산**

#### ③ 매력있는 경관 관리와 체계적인 성장관리

- 도시·비도시지역의 특성에 맞게 **경관 관리체계를 체계화**(경관법 개정, ’20.10), 신기술(VR, AR 등) 및 3차원 공간정보 활용방안 마련(’20.10)
- 지자체가 **난개발 관리수단**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적극 활용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강화(국토계획법, ’20.11)

### 4. 한반도 평화시대 준비

#### ① 남북 인프라 협력의 실천전략 마련 및 단계적 추진

- 대내·외 경협여건을 고려하여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인프라 협력의 부문별 추진전략**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경제** 기반 구축

#### ② 국제 철도·도로 연계 대비

-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을 위해 UNESCAP 등과 **국제포럼** 설립(’20.6), **국제 간선도로망(Asian-Highway)** 구성을 위해 **신규노선 지정** 추진(’20.11)

## ②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만들겠습니다.

### 1.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가시화

혁신성장 사업	성과 가시화 내용
자율주행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ity 내 실험 등이 가능한 <b>혁신성장센터</b> 구축 착수('20.4), 부분 자율주행 <b>보험제도</b> 완비('20.8), <b>자율주행 시범운영지구</b> 지정(3곳, '20.11)</li> <li>▶ <b>3D 정밀지도</b> 확대(8,300km), <b>C-ITS서비스</b> 실증('20.4), <b>미래차 시범도로</b>('20.6) 및 도로대장 AI 업데이트 시스템 구축 등 <b>인프라 정비</b></li> </ul>
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드론평화도시</b>(시범사업, '20.11), <b>드론공원</b>(4 → 8곳), <b>상용화 패스트트랙</b> 및 <b>공공부문 우선구매</b>('20.11) 등을 통해 <b>드론산업 기반</b> 구축</li> <li>▶ <b>불법드론대응시스템</b> 구축계획 수립(김포, '20.8), <b>드론탐지·자동추적 레이더</b> 배치(인천 '20.6), <b>실명제통합관리시스템</b> 구축('20.7) 등 <b>드론안전 확보</b></li> </ul>
스마트 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국가시범도시</b> 착공(세종, '20.7), <b>기존도시 스마트화</b>(챌린지사업) 확대(10 → 18곳), <b>AI 데이터허브</b> 구축('20.10) 등 <b>스마트시티 조성 본격화</b></li> <li>▶ <b>팀코리아</b> 활용 <b>인도네시아 수도 이전</b> 등 <b>해외진출 활성화</b>, 해외도시의 <b>마스터플랜</b> 수립 지원(5곳), <b>PIS펀드</b> 활용 금융지원</li> </ul>
스마트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스마트 턴키사업</b> 지속 확산(6건), <b>BIM설계</b> 의무발주 확대(대형 공공공사 전반, '20.1~) 등 <b>스마트 건설기술 산업화 촉진</b></li> <li>▶ <b>로봇시공·가상시공·스마트 안전관리</b> 등 핵심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하는 <b>스마트 건설기술 R&amp;D 사업</b> 착수(2천억, '20.4)</li> </ul>
수소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수소도시 안전관리 매뉴얼</b> 마련('20.3), <b>시범도시별 종합계획</b> 수립 및 <b>핵심시설 건설</b>(3곳, '20.7) 등 <b>수소도시 조성 착수</b></li> <li>▶ 주요 환승센터에 <b>수소교통 복합기지</b> 구축(후보지 선정, '20.9), <b>수소충전소</b> 추가설치(고속도로휴게소 15기, 혁신도시 1기, 행복도시 1기) 등 <b>인프라 구축</b></li> </ul>
공간정보 및 데이터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국토위성</b> 발사, <b>3차원 지도모델</b> 구축 시범사업 및 수요 맞춤형 <b>디지털 트윈 서비스</b> 시범운영(전주, '20.7) 등 <b>공간정보 산업 활성화</b></li> <li>▶ <b>보유데이터 중장기 개방전략</b> 마련('20.3), <b>빅데이터 선도과제</b> 발굴('20.6), <b>데이터맵</b> 및 <b>단일창구</b> 구축('20.11) 등 <b>데이터 경제 촉진</b></li> </ul>
제로에너지 건축(Z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공건축물</b> 제로에너지 적용 <b>의무화</b>, 구리갈매 등 <b>지구단위 공공주택</b> 사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및 <b>시범주택단지</b> 착공('20.11) 등 <b>ZEB 확산</b></li> </ul>

## 2. 국토교통 벤처·중소기업 집중 지원

### ① One-call 벤처·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

- 분야별 국토부·업계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태조사 및 애로사항 발굴, '국토교통기술 사업화 지원 허브(KAIA)'를 설치하여 애로사항 지원 총괄\*
  - \*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선진 사례, 기술, 경험 등을 지원
- 부처 내 분야별 지원전담관(과장급) 및 기업별 지원담당코치(4, 5급) 지정을 통해 규제 개선, 법령의 적극적 해석 등 컨설팅

### ② 국토교통 기업 특화 지원

- 중기부·산업부·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범부처 지원체계를 재구성하고 메뉴판형 문제해결 툴킷(tool-kit)\* 작성·보급
  - \* 창업 지원, 금융 지원, R&D 지원, 인력양성, 판로개척 등 단계별 지원사업
- 우수 신기술 적용이 가능한 테스트베드 확충, 시범사업 지원, 공공 구매 대책 등 국토교통 기업 맞춤형 종합 지원방안 마련('20.5)

### ③ 기업활동 제약 규제 원점 재검토

- 국토부 내 규제 솔루션팀을 설치하고('20.2), 국민의 개선요구가 높은 '국토교통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20.3) 후 맞춤형 규제 혁신 추진

### ④ 신규 일자리 창출

- 벤처·중소기업 집중 지원, 창업공간 조성(1,171개), 국토교통 혁신펀드(국비·민간 매칭 167억원) 등으로 '20년 일자리창출 목표(21,528명) 초과 달성 추진

## 3. 상생을 위한 일자리의 질 개선

### ① 건설업 공정성 강화

- 상호협력평가 가점 등을 통해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공사 확산('20.10), 적정임금제 전면 도입(방안 마련, '20.6) 등 임금보장 확립
  - \* (체불 방지) 상습체불업자 공표 확대, 체불방지 사업주는 상호협력평가·고용평가 가점 부여('20.9)



- 하도급 간접비에 대한 별도 지급규정 마련, 공제조합 의사결정체계 개편 및 이익잉여금 처리기준 마련('20.7), 건설업의 **투명성 강화**

## 2 운수·물류업 근로여건 개선

- **택시** 월급제·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고, 개인택시 양수요건을 개선 하여(경력요건 완화, '20.4) **청·장년 유입 유도**
- 버스인력 양성사업(3.1천명), 채용 박람회 등을 통해 **노선버스 주 52시간 근로제 안착**, 시행 1년간의 성과 분석을 통해 보완사항 발굴
- 과로·과적·과속 관행을 개선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고, 작업장 근로환경 개선 등 **택배종사자 보호**

## 3 공항 지상조업 근로환경 개선

- 사고 시 법인책임 확대 및 뒤통기상 시 경보 등 안전체계 정비('20.6), 주요 공항에 CCTV, 휴게실·화장실 등 **안전·편의시설** 확충('20.11)

# 4. 국토교통 산업 혁신

## 1 교통·물류 산업

- 선도부품 신규 개발(5종) 및 수입대체 국산화 개발(10종, 국제인증)을 위한 **대규모 국가R&D**를 실시('20.4~'25.12)하여 **철도 부품산업 육성**
  - 시험인증비, 컨설팅 등 국제인증 취득지원 확대('19. 5억 → '20. 10억원), **오송 시험전용선로 운영**을 합리화(방안 마련, '20.9)하여 기업 지원
- 안전성 문제가 적은 장치에 대한 **튜닝 승인절차 면제**('20.11),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 건설(설계 착수, '20.9)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
  - 소량 생산차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수제차 시장을 활성화, 대체부품 생산장비 도입을 지원하고('20.10), 친환경차 검사기술 개발('20.11)
- 중소기업체를 위한 **공유형 물류단지** 조성<sup>1</sup>에 착수하고(수도권 3곳이상, '20.9), 첨단 스마트 물류센터에 대해 자금 등 지원(인증제 도입, '20.10)
- 항공기 도입 **공적보증**('20.6), 지역 맞춤형 **항공산업 활성화**<sup>\*</sup>

\* (김포) LCC 경정비, (사천) 항공기 중정비(KAEMS), (인천) 화물기 개조, 해외 엔진업체 유치

## 2 건설 산업

- '100대 혁신뿌리기업'을 선정하고('20.8) 시공능력평가 가산, 입찰평가 가점, 스마트 건설지원센터 우선 입주 등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육성**
  - \* (중소업체 보호) 우량기업에 대한 공제 보증 수수료 인하(최대 5%)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30%), 하도급 간접비 지급 등 지속 추진
- **종합·전문업 간 상호 진출**(‘21년) 대비 실적·주력분야 공시 등 **제도를 완비**하고 전문업종의 **대업종화**(‘20.9) 등 **건설구조 개편 완료**
  - \* 대국민 공모를 통해 건설규제 전면 조사(‘20.3) 후 「건설 규제개혁 로드맵」 마련(‘20.6)

## 3 부동산 서비스 산업

- 업종별 맞춤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20.6), **프롭테크** 등 **부동산 新산업 육성방안** 마련(‘20.11)
- 리츠 운영규제 합리화, 영업범위 확대 등 **자기관리리츠 활성화**(‘20.7), 인가·검사업무 위탁 등 **공모리츠 체계를 개편**(‘20.11)하여 **리츠시장 육성**
- 중개법인 역량 강화, 행정처분 체계 개편 등 **중개서비스 활성화**(‘20.11), 중소법인 참여 확대 등 **공정한 감정평가 환경 조성**(방안 마련, ‘20.6)

## 4 국토교통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 KIND의 타당성조사 지원(75억원, ‘20.2) 및 **해외인프라센터 확대**(‘20.7), 진출기업 금융자문·주선 지원(4건) 등을 통해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 **제안형펀드**(2천억원, ‘20.3) 등 **PIS펀드** 투자 대상을 확정하고(5천억원, 7건), **GIF(4~7호)** 투자를 통해 **베트남, 칠레** 등 해외진출 다각화 지원
  - **한국형 스마트 공항모델 구축** 등 **종합적인 수주지원방안** 마련(‘20.7)
- 스타트업 기술 연계 신규 ODA사업 지원(‘20.10), 해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민·관 정례협의체 구성(‘20.4) 등 **벤처·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미얀마 달라신도시, 태국 도로 협력 등 **신남방 G2G 협력**을 통해 **지역개발·교통 인프라 신규 프로젝트\*** 발굴
  - \*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20.12 실시설계 完), 베트남 흥연성 산업단지(‘20.10 토지사용권 취득)
- **한·중 간 제3국 진출협력을 위한 공동포럼 개최**(‘20.9), **러시아(연해주) 진출** 지원을 위해 **한국형 산단 개발(기공식, ‘20.10)** 등 **신북방 해외진출 확대**

### ③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1.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

#### ①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를 연내 차질없이 공급
  - 특히, 청년을 위해 행복주택(1만호), 청년공유주택\*(1천호) 등 공적임대 4.3만호 및 기숙사형 청년주택(1천호) 공급
  - \* 역세권 등 우량입지의 노후 고시원('20.8, 1호 노량진 청년주택)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

< 주거복지로드맵 공적주택 공급계획 및 실적(단위: 만호) >

공급유형	공급계획	'18년(실적)	'19년(실적)	'20년	'21년	'22년
공공임대	90.2	17.2(19.4)	17.6(18.5)	18.1	18.6	18.7
청년	21.0	3.6(3.7)	4.1(4.8)	4.3	4.5	4.5
신혼부부	25.0	3.3(3.0)	4.6(4.4)	5.2	5.8	6.1
고령자	5.0	0.9(1.4)	0.9(0.9)	1.0	1.1	1.1
일반 저소득	39.2	9.4(11.3)	8.0(8.4)	7.6	7.2	7.0
공공분양(착공)	15.0	1.8(1.9)	2.9(3.1)	2.9	3.5	3.9
<b>합계</b>	<b>105.2</b>	19.0(21.3)	20.5(21.6)	21.0	22.1	22.6

- 수도권 30만호 등 신규부지를 반영하여 '20~'25년간 공적주택 공급 계획 수립, '25년 장기 공공임대재고율 10%\* 확보 추진(OECD 10위 內)
  - \* 장기공공임대재고 목표(%) '18년 148만호(7.1%) → '22년 200만호(9%) → '25년 240만호(10%)
  - 그 간의 추진상황, 환경변화 등을 감안, '22년이후 중장기 공급계획, 1인가구·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을 반영하여 주거복지로드맵 보완('20.3)
- 특색있는 지역산업과 연계된 일자리 거점이 되도록 공연장, 웹툰센터, 무형문화재 교육시설 등과 복합된 문화예술인 행복주택 등 확산
  - \* (시범사업 3곳) 서울 국립극단, 부천 영상, 지방 1곳
-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입주자격, 임대조건이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공급\*하여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주거환경 조성
  - \* 유형구분 없는 공공임대 공급근거 마련('20.4), 선도사업 승인(2곳 약 1천호, '20.11)

## ② 낙후된 주거공간의 재창조

- 기존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주도의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쪽방촌**을 정비하고 영구임대, 행복주택 공급(영등포 지구지정 '20.11, 지방 1곳 '20.9)
  - \* (새뜰마을) 사업 유형에 쪽방촌 추가, 국비지원 및 지자체의 토지매입비 지원한도 확대('20.3)
- 붕괴가 우려되는 **노후아파트**에 대해 긴급 정비사업(도시정비법), 도시재생 인정사업제도(국비 50억원)를 연계하여 정비 착수(영등포, '20.6)
- 준공 후 30년이 도래(서울내 '22년까지 19개단지 3.1만호)하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주거재생 시범모델** 및 선도사업 추진방안 마련('20.11)
- 노후고시원·쪽방거주 등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및 자활·돌봄 등 패키지 지원**
  - 찾아가는 상담(~'19.7) 및 관계기관 합동 전국 전수조사('19.12~'20.1) 등을 통해 발굴한 약 8천 가구 공공임대 이주절차 착수('20.3~)
  - \* 수요발굴·주거복지서비스 등을 위해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확대(39개 → 45개 이상)
- 침수우려 등 지원이 시급한 **반지하 가구**는 지자체 전수조사를 실시(~'20.6)하고, 공공임대 우선공급·보증금 지원 등 지원 강화

## ③ 공동주택 거주자 권리보호 강화

-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측정·확인제도를 도입('20.6)하여 층간소음 관리, 주택성능등급 기준을 개선('20.10)하여 **공동주택의 성능 향상** 유도
- **공동주택 하자 저감**을 위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품질점검단 운영 등 공동주택 사용검사체계 구축, 부실시공업체 감리 강화('20.6)

## 2. 서민 주거거점의 속도감있는 공급

### ①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조기화 및 주택공급 활성화

- 3기 신도시 3곳(남양주·하남·인천)을 포함하여 지구지정이 완료된 **1·2차 지구 15.4만호\***(16곳)는 **지구계획** 수립('20.下)
  - \* (신도시)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 (대·중규모) 과천·시흥하중·부천역곡·성남낙생 등

- 입지가 우수한 일부 지구는 **첫마을 시범사업**으로 '21년 입주자 모집, 고양·부천 등 3차지구 10만호는 '20년 상반기 지구지정\* 등 추진

\* (신도시) 고양창릉·부천대장, (중규모) 수원당수2·안산장상·안산신길2 등

\*\* 용인구성역 등 도시개발사업은 '20년 하반기 중 추진

- 로드맵 상 '20년 착공예정인 공공주택 8.2만호 중 1만호\* 조기 착공 (2~6개월), 민간매입약정제 확대를 통해 **매입임대 입주시기 조기화**

\* '20.上 1.6천호(남양뉴타운, 과천지식), '20.下 8.4천호(행복도시, 인천영종 등 9개소)

- 택지개발지구 내 **미매각 용지의 용도변경**을 통해 수도권에 행복주택 등 **추가 건설**('20.上 대상지 발굴, '20.下 사업승인)

\* (2기 신도시)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여 GTX 역세권개발 방안 마련 등 자족기능 보완

## ②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

- 서울 도심부지(4만호)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20년까지 1.6만호 사업승인 완료, 이 중 1천호는 연내 입주자 모집 진행

- **서울 내 주택공급**을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공주도형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 주택공급 지원방안\*** 마련

\* 서울에 필요한 소규모 정비사업, 1인 주거용 주택 등을 위한 지원방안

-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 확대\*(20.6), 공모 등을 통해 공공 시행 **가로주택 사업지 발굴·정비 착수**(시범사업, '20.10)

\* 용자 금리 인하(1.5% → 1.2%), 공영주차장 복합 개발 시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등

## 3. 인구구조 변화 대응

### ① 1인가구 주거지원 강화

- 독신가구 증가 및 주거트렌드 변화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확대 등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방안\*** 마련(20.6)

\*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기숙사형·창업지원형 등 공급방식 다양화, 빌트인 주택 확대 등

- 가구변화 추세를 감안,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수별 적정 대표면적**을 산정(20.10)하고 **1~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

-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20.6),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시범 도입하고,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택 지원펀드 도입('20.11)

## ②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

- 국민임대·행복주택 신혼특화단지(물량 50~80%를 신혼부부 우선 공급) 약 2천호 등 **공적임대 5.2만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
- 입주자 모집(1만호), 신규 사업승인(3만호) 등 **신혼희망타운** 본격 공급 착수, 단지 내 돌봄센터 조성 등 육아환경 개선
-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해 2자녀 가구도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20.6)하고, 다자녀 매입·전세임대를 도입·공급(2천호, '20.3)
  - 다자녀 공공리모델링 주택 첫 공급(협소 원룸을 합쳐 2룸으로 확장, '20.3), 금융지원 시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 및 대출한도 등 확대('20.1~)

## ③ 고품자 친화적 거주여건 조성

- 공공리모델링 주택(1천호), 사회복지관·영구임대 결합형 **고령자 복지 주택**(1천호)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총 1만호)
- 스마트홈 헬스케어 실증단지 구축, **스마트홈 서비스** 확산을 위한 플랫폼 등 기술개발 착수('20.6)

## ④ 빈집·방치건축물 정비 본격 추진

- 시급한 사회문제(안전사고, 주거환경 저해 등)인 쇠퇴지역내 **빈집**의 정비·활용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내 빈집 철거비용 지원\*
  - \* 소유자가 10% 부담하고, 철거 후 부지를 3년 이상 공공용(주차장 등)으로 활용시 최대 1천만원
- 빈집 밀집지역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저리 기금 **융자\***를 지원하고 시범사업을 착수(4곳 이상, '20.10)
  - \* (한도) 총 사업비의 50%(공공참여시 20%p, 공적임대 20% 공급 시 20%p 추가) / (금리) 1.2%
- **10년이상 방치된 건축물 정비 의무화**(방안 마련, '20.11), 공공 주도 정비 사업·도시재생인정제도·공공주택 건설 등을 통해 정비(시범사업 5곳, '20.6)

## 4.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

### ① 부동산시장 관리체계 강화

- 권역별 주택시장 협의체 정례화 및 정기 모니터링 강화 등 **지역별 맞춤형 대응 강화**, 주택가격동향조사·소비심리지수 등 통계 개선
    - 주요 선진국의 주택시장 관리 제도를 조사·분석하여, 부동산시장 관리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검토('20.6)
  - 불법행위 대응반 신설, 전담 특사경 배치 등 불법행위·실거래 상시조사체계 구축('20.2), 자금조달계획서 강화('20.3)를 통해 **거래질서 확립**
  - **공시가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세 반영률 지속 제고, 산정방식 및 기초자료 공개 등 투명성 향상, 중장기 로드맵 수립('20.10)
  -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하여 무순위 물량을 최소화하고, 당첨 시 거주 의무기간을 확대하는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제도** 개선(법 개정, '20.6)
  - 공동주택용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20.6), 대토·채권 보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20.10) 등 **시장관리 기반 정비**
    -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이 되도록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방안 마련, '20.3)
- \* 기본형건축비 산정모델 개선, 41~49층 기본형건축비 고시, 발코니확장비 심사참고기준 개선 등

### ②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 조성

- **임차인 보호** 기반이 되는 임대차 신고제를 차질없이 도입(법 개정), 등록임대 사후관리 강화 및 임차인 정보접근성 제고('20.4)
- **단독·다가구 세입자**를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확대방안 마련, 보증기간에 따른 보증료 역차별 개선 등 보증료율 체계 개선('20.6)

### ③ 정비사업, 주택조합 공공성 강화

- 의무임대는 장기임대로 활용('20.9)하여 정비사업의 **공공성** 제고, 입찰보증금 납부기준 제시('20.9) 등 공정한 입찰환경 조성
- 주택조합의 조합비 사전 총회승인 의무화, 조합 정보공개 확대, 주요정보 주기적 공시(지자체) 등을 통해 **선의의 조합원 피해 방지**('20.7)

#### ④ 교통 시스템을 혁신하여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들겠습니다.

##### 1.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 ① 철도망 확충으로 이동속도의 획기적 제고

- GTX A노선 공사, B노선 기본계획 착수('20.1), C노선 민자 기본계획 고시('20.11), 신안산선 공사, 서부권 등 급행철도 검토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
- 중앙선(원주~제천)에 EMU-250(260km/h) 연내 투입, 400km/h 초고속 열차 도입 착수(추진 중인 고속철도 2복선화 구간의 기본계획 반영, '20.10)  
\* (열차운행 세부전략 수립) 거리·속도·이용패턴 관점에서 간선열차 운행체계 개편 착수('20.4)

#### ② 간선 도로망 기능 강화

-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설계 및 타당성평가 기준 마련, 지하 토지사용 보상근거(도로법)·보상액기준 등 마련 후 시범사업\* 착수('20.11)  
\* 판교~퇴계원, 강일~일산 등 수도권 간선망 사업 대상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 소음·진동·안전 걱정없는 **대심도** 교통시설 건설 법적기반 정비('20.6)
- 1·2순환망 연결 등 방사형 도로망 보완, 서해안·제2경인 등 수도권 고속도로 소통애로구간 개선대책 마련('20.11)으로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 (이용자 중심 기능형 도로네트워크) 국가고속망, 권역간선망, 생활도로망 체계 구축('20.11)

#### ③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

- 서울역('20.2) 및 청량리역('20.3) **환승센터** 구상에 착수하여 철도망 연계교통 이용편의 제고 및 서울 강북지역 활성화 지원  
- 공공기관 참여 확대, 공공주택·도시재생 뉴딜 등과 연계를 통해 주요 환승센터 사업\* 신속 추진, 권역별 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20.11)  
\* 유성터미널·울산역·사상역·태화강역(착공), 킨텍스역(설계), 청계산입구역 등(사전타당성조사)  
\*\* (수도권 고속도로 환승벨트 계획 수립, '20.11) 하남드림休 등에 철도·트램·버스 등 연계
- GTX 거점역(환승센터 등)을 중심으로 도시철도, 트램, BRT 등 **대중 교통 연계체계**를 확립하여 철도역 접근시간 단축(방안 마련, '20.11)



- **퍼스트·라스트 마일\***을 위한 공유모빌리티 환승시설 설치기준 마련, 개인용 이동수단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해 전용도로 도입, 법령 정비('20.11)
- \* (퍼스트 마일) 출발지점에서 대중교통까지 거리, (라스트마일) 대중교통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거리

## 2. 교통 편의 제고

### 1 대중교통 이용편의 개선

- M버스 노선 확충(35→44개) 및 예약제 확대(8→20개), 수요맞춤형 M버스 도입('20.9), 고속버스 프리미엄노선 확대(15%) 등 **대중교통 확충**
- **대중교통의 속도 제고**를 위해 S-BRT 기본설계 착수('20.9), 간선도로에 고속 전용차로, 연계환승시설을 갖춘 BTX 도입(추진방안 마련, '20.8)

### 2 편리한 서비스 확대

- (철도) 인터넷 포털을 통한 승차권 예·발매 시행, 승차권 무료 예약 변경 서비스 확대(SRT, '20.11), 모든 열차에 Wi-Fi 중계기 100% 설치
- (도로) 소형 회전교차로 시범적용(4~5곳), 지능형 교통신호 확대(439곳), 병목구간 개선(178곳) 및 다차로 하이패스(13곳) 설치 등 편의성 향상
  -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집중 공급(280곳) 및 생활SOC 복합화 조성사업 지원, 대형 쇼핑몰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강화**('20.6)
- (공항) 주차장 예약시스템 도입(김포·인천 등) 및 전국(김포·김해 등)으로 입국장 면세점 확대('20.6), 이지드롭 확대(서울 호텔, '20.9)

### 3 신도시 교통불편 완화

- **기존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사업 지연지역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여 보완대책 시행('20.11), **신규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신속 수립
- \* 2차 지구(남양주·하남·인천·과천): '20.上, 3차 지구(고양·부천): '20.下

### 3. 교통 공공성 강화

#### ①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20.6) 광역버스 소외정도 등을 감안한 시범사업('20.7) 실시로 **광역버스 서비스 혁신기반** 마련
- 휠체어 탑승버스(4개 → 8개노선) 및 전용 콜택시(3,420대 → 3,680대) 확대, 철도플랫폼 고상화, 철도역 엘리베이터 확충 등 **교통약자 배려** 확대

#### ② 교통비 절감 확산

- 광역알뜰교통카드를 13개 시·도에서 본격 추진하고('20.1, 7만명), 저소득층 청년 마일리지 혜택을 확대하여('20.3) **대중교통비 절감**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할증제도 개선(방안 마련, '20.11), 대구부산·서울춘천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20.11)

### 4. 교통 플랫폼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

#### ① 도심 내 교통까지 항공운송 패러다임 확장

- 비가시권·다수비행 지원 K드론시스템 실증('20.5), 드론택시 시험비행 및 비행자유화구역 지정('20.11)을 통해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 선도

#### ② 자율주행차 서비스 조기 확산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확대(45인승 버스, 세종 '20.10), **레벨3** 안전기준 시행('20.7), **레벨4**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20.11) 등 **자율주행 가시화**

#### ③ 플랫폼 택시 확산

-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차질없이 법제화하고, 모빌리티 컨설팅 지원팀 설립('20.6)을 통해 **혁신적 플랫폼 택시 모델**을 대중적으로 확산

#### ④ 한국형 MaaS(Mobility as a Service) 활성화

- \* MaaS: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러 교통수단을 한 번에 검색·예약·결제하는 서비스
- 주요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관광형 MaaS** 확산, 버스·택시·렌터카·자전거 등 사업자와 협의하여 도심형·거점형 등 **MaaS 도입방안** 마련('20.7)

## 5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1. OECD 수준에 걸맞은 교통안전 확보

#### 1 교통사고 사망자수 2천명대로 감축('19년 3,351명, 14%이상 감축)

- 안전속도 5030 정착(연내 전국 시행), 및 제한속도 15존 도입, 우회전 일시정지, STOP 사인 설치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확립
- **고령자·어린이 맞춤형대책\*** 수립('20.3), 음주운전 사고 보험금 구상액 상향('20.6) 및 高價차사고 과실비율체계('20.11) 등 **자동차 보험 개선**
- \* 고령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도입(공공형택시 대상 확대), 횡단보도 고령자 쉼터 확충, 어린이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DTG) 의무화, 아파트단지 내 맞춤형 교통안전기준 신설 등
- **화물차 사고예방**을 위해 **모바일 DTG 보급**을 확산하고, 배달업체와 협의체를 구축하여 **이륜차 안전교육 확대** 등 **사업자 책임 강화**
- \* (화물) 고령자 자격유지 검사, (이륜차) 후면번호판 단속장비 도입 및 공익신고 활성화
- 행안부·경찰·지자체 등과 **교통안전 범부처 협업프로젝트\***를 가동해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별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핀셋 관리 강화**
- \* 지자체별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감축목표 설정 및 달성도 주기적 공표, 교육·홍보 강화

#### 2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살얼음 사고 예방** 등 겨울철 **교통안전대책**('20.1)을 추진하고, **위험도로 개선** 및 **보행자 사고예방사업 확대\*** 등 **위험요소 사전제거·예방**
- \* 도로 기하구조(180곳) 및 교통사고 잦은 곳(65곳) 개선,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300곳) 등
- AI 스마트CCTV 확충(500곳), **포트홀 24시간 내 보수시스템** 구축('20.11), **터널원격제어·산사태예측체계** 시범구축(10곳) 등 **안전시스템 고도화\***
- \*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K-Road) 설계('20.10), **졸음쉼터** 확충(고속 15곳, 국도 10곳)

### ③ 7년(항공), 6년(철도) 연속 사고성 사망사고 ZERO 化

- (항공) 관리대상 안전지표 확대(3→20종, '20.4), 안전정보 수집·분석 시스템 개발('20.7) 등 **위해요인 사전 발굴 및 개선 체계** 구축
  - 외항사 조종사 등에 대한 음주단속 근거 마련('20.11), 항공사의 자발적 안전투자 유도를 위해 **안전지출·투자내역 공시제도** 시범시행('20.5)
- (철도) 운행차종 변경 시 기관사 실무수습 실시 제도화('20.10), 차량 제작 시 **국제 안전기준 적용 대상 확대**(고속차량→전 차종, '20.11)
  - \* (철도시설 관리 고도화) 원격감시·자동검측설비 설치 등

## 2. 건설안전 위협요인 근절

### ①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3백명대로 감축('19년 428명, 14%이상 감축)

- 중대사고 시 재발 방지대책 승인 전 공사 불허(추가비용 발주자 부담), 안전 부실업체 별점 강화 등 **주체별(발주자·시공사) 책임 확대**
- 민간건축공사 부실감리퇴출('20.6) 및 감리비지급 확인대상 확대('20.11), 고위험공사 전반으로 **작업허가제 확대**('20.3) 등 **취약분야 집중 관리**
- 추락·끼임 방지를 위해 **CCTV 설치 및 작업지킴이**(유도원·신호수) 배치 의무화, 안전시설 설치비의 공사비 계상 등 **현장중심 안전관리 강화**

### ②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 장기 미수검·불합격장비 처벌 강화 및 건설현장 사용·도로운행 제한('20.10),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 등 **안전검사 강화**
- 국민 불안을 덜기위해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기준 강화**, 안전장치 의무화(원격조종, '20.6), 검사기관 평가·관리 강화 등 **타워크레인 집중 관리**

### ③ 불량자재 퇴출

- **레미콘 품질관리**를 위해 불량레미콘 납품 거부(또는 취소)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 강화**('20.6)
  - \* (자재관리 확대) 생산·수입·판매자에 품질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건설자재·부재 범위 확대('20.6)

### 3. 생활환경 안전 확보

#### ① 노후SOC 및 지하공간 체계적 관리

- 중요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공통기준을 마련하고('20.3), **유지관리 투자 확대**(15종 시설 약 5.5조원, 40% 증가)
  - 현장점검 확대(200곳→240곳) 및 부실 점검업체 적극 퇴출, 인프라 총조사 및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0~'23)을 통해 체계적 관리 추진
- 기초조사 강화, 협의기간 단축 등 현장 중심으로 **지하안전 영향평가 제도** 개선('20.9),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 마련('20.6)
  - \* (지하공간지도) 85개 시 구축, 재해재난 발생 시 공간정보를 1일 이내에 제작·제공('20.4)

#### ②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건축물관리법 시행('20.5)에 따라 **화재 취약 다중이용건축물의 성능보강 의무화\***, 정기점검 의무 부여 등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체계** 구축
  - \* 보강 의무화 건축물 비용보조 사업 확대(72→384동), 모든 주택 자발적 성능보강시 저리용자 지원
- **화재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성능기반설계 도입방안('20.10) 및 불법 건축자재 유통 근절을 위한 건축자제품질 혁신방안('20.9) 마련

#### ③ 도시 안전망 구축

- 지자체·관계기관 CCTV를 상호 연계하여 도시 안전을 제고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보급('19. 27곳→'20. 30곳) 및 **연계서비스\*** 확대
  - \* 여성 안심귀가(여가부), 해양 사고(해경), 112 피해자 보호(법무부), 배출가스 위반(환경부) 등

#### ④ 생활 위해요소 대응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국형 2층 전기버스 공급(20대), M버스 대·폐차 및 신규노선 개설·증차 시 CNG·전기버스 전환 유도(인가·면허기준 강화 등)
  - 수소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부제 적용예외, 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20.7), **중온 아스팔트** 단계적 확대 적용
- 신종 바이러스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공항, 철도역사,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방역 철저, 관련 종사자 위생관리 지원



##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국토교통부 일반 현황 ..... 25
2. 성과관리 전략계획 개요 ..... 30



##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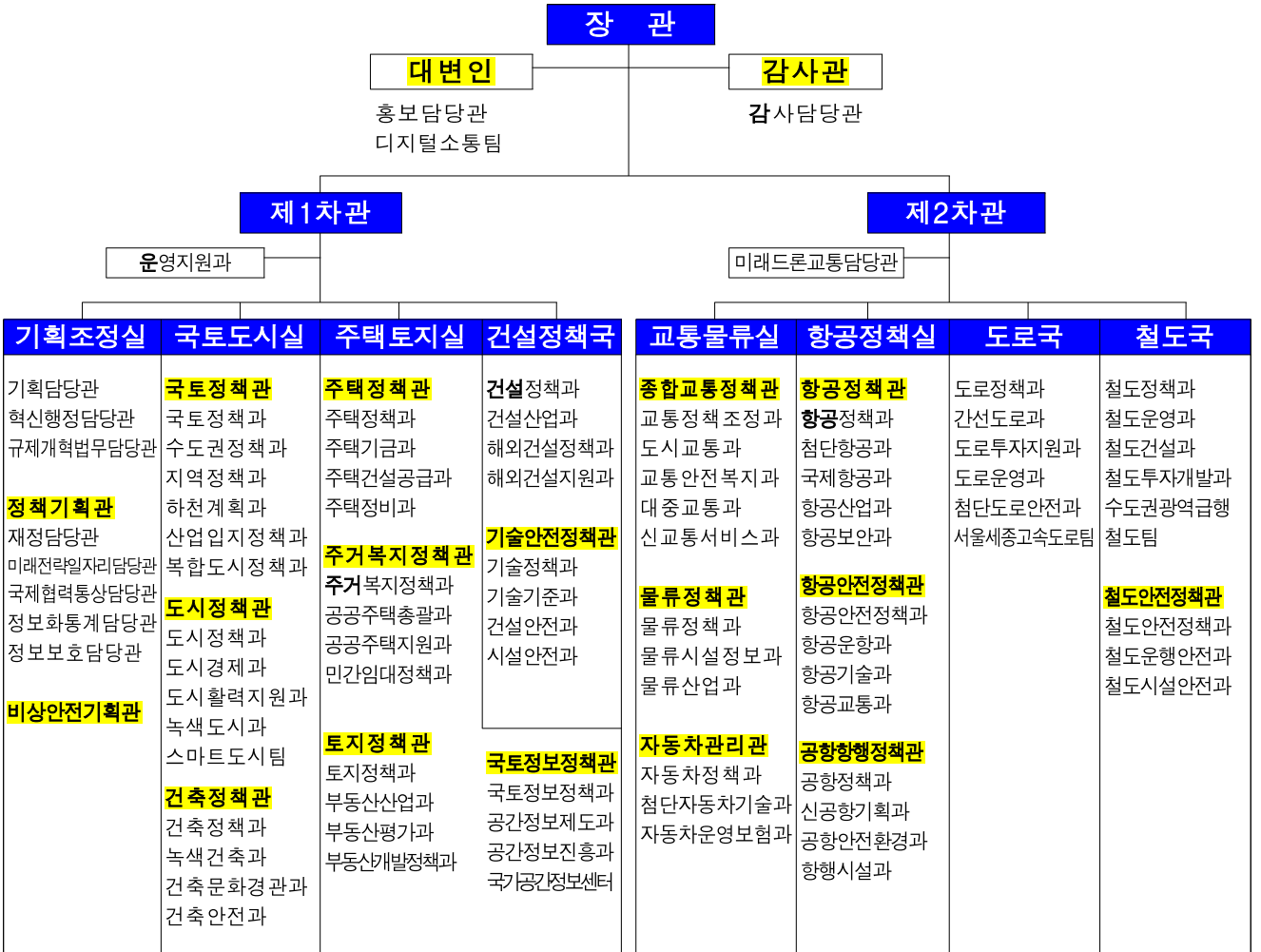
#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 1. 국토교통부 일반 현황

기구	기준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부 : 2차관, 5실, 3국, 19관, 86과·4팀</li> <li>○ 소속 : 1차 15개, 2차 41개, 3차 3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운영기관 2개(국토지리정보원, 항공교통본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4,19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부 : 1,009명 (한시정원 16명 포함)</li> <li>- 소속 : 3,182명</li> </ul> </li> </ul>

### (1) 조직

#### □ 본부



※ 한시조직 (1개) : 신공항기획과('21.6.30일까지 존속)

※ 총액인건비제팀 (4개) : 디지털소통팀(~'21.9.30.), 서울세종고속도로팀(~'22.2.28.), 스마트도시팀(~'23.1.31), 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23.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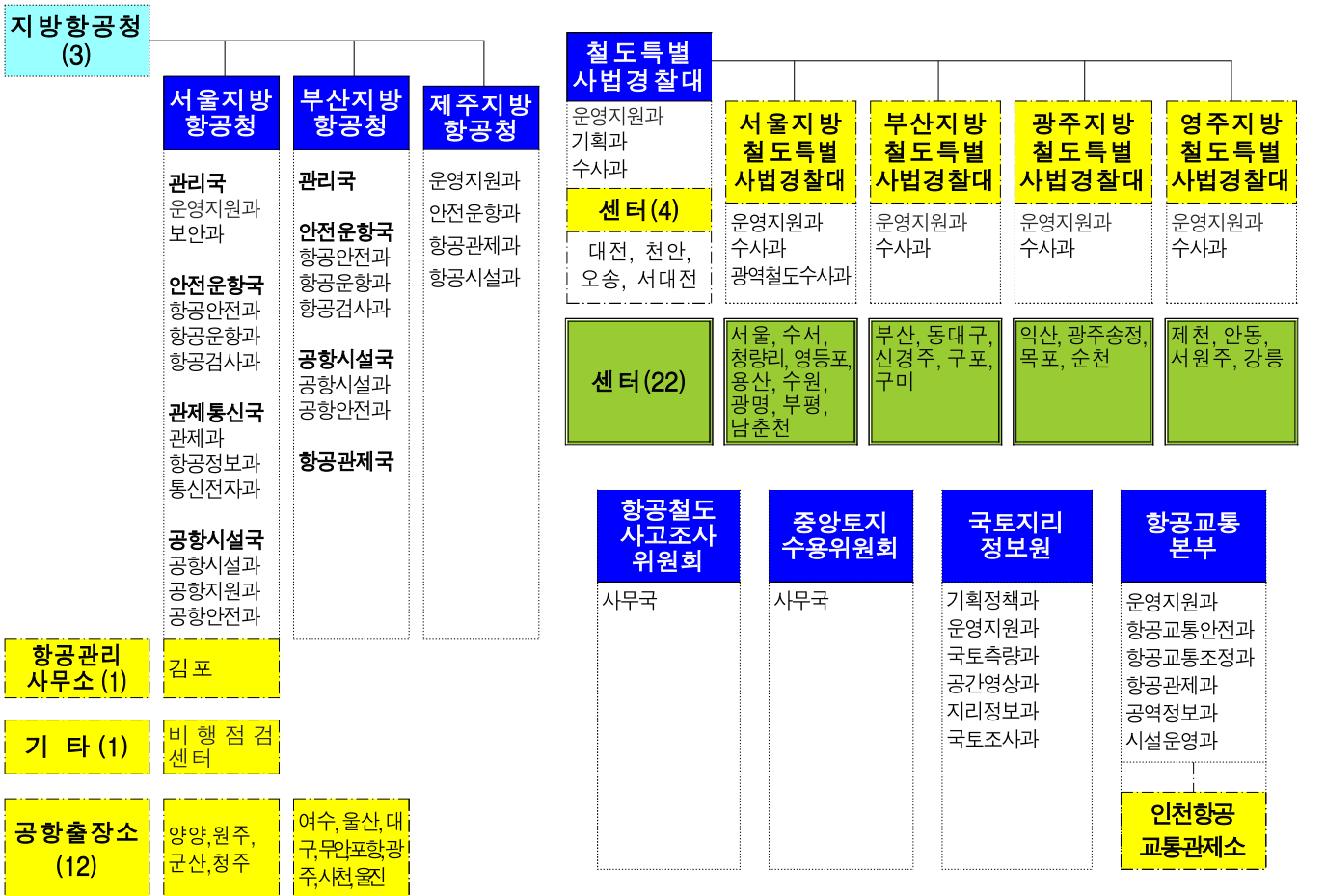
※ 벤처형 조직 (1개) : 미래드론교통담당관(~'21.7.31, 벤처형 조직)

※ 별도조직 (8개) : 공공주택본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용산공원원조성추진기획단, 지적재조사기획단,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국가건축정책위원회기획단

※ 긴급대응반 (1개) :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조사총괄과) ('20.2.14~'20.8.13)



# □ 소속기관 (87개 : 1차 15개, 2차 41개, 3차 31개)



■ 1차 소속기관  
 ■ 2차 소속기관  
 ■ 3차 소속기관  
 책임운영기관(2) : 국토지리정보원, 항공교통본부

## (2) 인 원

### □ 기준정원

(단위 : 명, 기준정원 \* 한시정원 포함)

구 분	계	정무직	고공단	별정직	임기제	3·4~ 4급	4·5~ 5급	6~ 9급	연구직		경력관
									연구관	연구사	
계	4,191	4	35	7	5	134	636	3,343	4	21	2
본 부	1,009	3	26	7	1	86	430	453	-	1	2
소속기관	2,741	1	9	-	2	41	168	2,511	-	9	-
책임운영기관	441	-	-	-	2	7	38	379	4	11	-

\* 본부 한시정원 16명 포함(신공항기획과 4급1, 4.5급1, 5급2, 6급2 / 도시정책과 5급1 / 주거복지정책과 5급1 / 도시경제과 5급2, 6급2 / 서울세종팀 5급1, 6급2 / 도시교통과 6급1)

\*\* 긴급대응반 7명 미포함(4급1, 4.5급1, 5급2, 6급3)

\*\*\* 책임운영기관 2개(국토지리정보원, 항공교통본부)

### □ 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고공단	별정직	임기제	3·4~ 4급	4·5~ 5급	6~ 9급	연구직		경력관
									연구관	연구사	
계	4,359	4	44	7	5	184	784	3,311	-	18	2
본 부	1,398	3	36	7	1	138	584	626	-	1	2
소속기관	2,566	1	8	-	2	40	165	2,341	-	9	-
책임운영기관	395	-	-	-	2	6	35	344	-	8	-

###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9	'20	'21	'22	'23
□ 재정사업 합계					
○ 총지출	432,191	501,317	593,518	645,521	659,688
(전년대비증가율, %)	8.8%	16.0%	18.4%	8.8%	2.2%
○ 총계	1,148,046	1,230,145	1,211,273	1,229,734	1,299,577
(전년대비증가율, %)	0.8%	7.2%	△1.5%	1.5%	5.7%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2,902	3,040	3,311	3,529	3,760
(전년대비증가율, %)	3.6%	4.8%	8.9%	6.6%	6.5%
○ 기본경비	423	460	477	491	506
(전년대비증가율, %)	△2.8%	8.7%	3.7%	2.9%	3.1%
○ 주요사업비	368,448	380,118	406,884	419,454	482,590
(전년대비증가율, %)	△6.5%	3.2%	7.0%	3.1%	15.1%
□ 예산					
○ (총)지출	175,741	204,963	241,322	278,963	297,235
(전년대비증가율, %)	7.2%	16.6%	17.7%	15.6%	6.5%
○ 총계	371,773	383,618	410,672	423,474	526,833
(전년대비증가율, %)	△6.8%	3.2%	7.1%	3.1%	24.4%
<b>【일반회계】</b>					
- (총)지출	51,142	60,542	72,608	79,793	83,838
(전년대비증가율, %)	18.6%	18.4%	19.9%	9.9%	5.1%
- 총계	194,822	208,005	223,375	205,804	250,775
(전년대비증가율, %)	△2.5%	6.8%	7.4%	△7.9%	21.9%
<b>【교통시설특별회계】</b>					
- (총)지출	94,030	114,467	123,355	150,297	160,266
(전년대비증가율, %)	1.9%	21.7%	7.8%	21.8%	6.6%
- 총계	144,106	142,424	139,005	168,628	182,772
(전년대비증가율, %)	△14.5%	△1.2%	△2.4%	21.8%	8.4%
<b>【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b>					
- (총)지출	175	184	338	354	372
(전년대비증가율, %)	7.4%	5.1%	83.7%	4.7%	5.1%

구 분	'19	'20	'21	'22	'23
-총계	175	184	338	354	372
(전년대비증가율, %)	7.4%	5.1%	83.7%	4.7%	5.1%
<b>【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b>					
-(-총)지출	370	187	591	175	206
(전년대비증가율, %)	160.6%	△49.5%	216.0%	△70.4%	17.7%
-총계	2,646	3,423	3,524	354	384
(전년대비증가율, %)	8.6%	29.4%	3.0%	△90.0%	8.5%
<b>【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b>					
-(-총)지출	30,024	29,582	44,429	48,334	52,554
(전년대비증가율, %)	6.4%	△1.5%	50.2%	8.8%	8.7%
-총계	30,024	29,582	44,429	48,334	52,554
(전년대비증가율, %)	6.4%	△1.5%	50.2%	8.8%	8.7%
□ 기금					
○ (-총)지출	256,450	296,354	352,196	366,568	362,453
(전년대비증가율, %)	9.9%	15.6%	18.8%	4.1%	△1.1%
○ 총계	776,273	846,524	800,601	812,721	829,061
(전년대비증가율, %)	5.0%	9.0%	△5.4%	1.5%	2.0%
<b>【주택도시기금】</b>					
-(-총)지출	255,931	295,828	351,532	365,912	372,914
(전년대비증가율, %)	10.0%	15.6%	18.8%	4.1%	1.9%
-총계	773,938	844,191	798,292	804,109	810,715
(전년대비증가율, %)	5.0%	9.1%	△5.4%	0.7%	0.8%
<b>【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b>					
-(-총)지출	520	526	664	656	675
(전년대비증가율, %)	△15.2%	1.2%	26.2%	△1.2%	2.9%
-총계	2,335	2,336	2,309	2,152	2,006
(전년대비증가율, %)	△0.4%	0.0%	△1.2%	△6.8%	△6.8%

## 2. 성과관리 전략계획 개요

### (1) 전략계획의 주요특성

- 문재인 정부 3주년을 맞아 국정과제 등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들을 돌아보고, 이후로도 주요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임무와 비전 설정
  -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 13개 성과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국토의 경제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혁신 등 주요 정책 추진
  - 또한, 주거복지망 확충,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교통 시스템 혁신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고유정책 분야를 목표로 설정
- 전략계획 내 목표를 실·국별 단순 조직체계가 아닌 공통된 성과목표를 가지는 정책을 동일한 전략목표로 통합하여 설정
  - 경제의 활력이 살아나도록 노후산단 재생,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의 혁신거점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거점 간 교통인프라 확충
  - 혁신기술 고도화, 벤처·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 드론·자율차 등 혁신기술 고도화, 국토교통 분야의 중견기업 육성, 건설·물류업 분야의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의 역동성 제고
  -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는 따뜻한 포용사회의 기반 조성
    -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여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고, 교통사고 및 건설현장 사망자수를 획기적으로 감축
    -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고,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고하여 출퇴근길을 편안하게 개선
  -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함께 잘 사는 나라’ 구현에 이바지
    - 청약 및 공시제도 개편, 임차인 보호 확대 등 불공정성이 내재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혁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 (2) 전략계획의 목표체계

### 임무

국토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효율적인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의 터전 조성

### 비전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

#### 전략목표

I.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한다.

II.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혁신한다.

III.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IV. 교통 시스템 혁신을 통해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든다.

V.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 성과목표

1. 지역경제를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한다.
2. 지역균형발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3. 품격 있는 도시공간을 구현한다.

1.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한다.
2. 국토교통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산업을 혁신한다.

1.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을 구축한다.
2. 속도감 있는 서민 주거거점을 공급한다.
3.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1. 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2. 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
3. 교통 플랫폼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을 구현한다.

1. OECD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한다.
2. 건설안전의 위협요인을 근절하고 생활환경 안전을 확보한다.





## Ⅲ. 세부 추진계획

1.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한다. .... 35
2.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혁신한다. .... 50
3.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 63
4. 교통 시스템 혁신을 통해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든다. .... 77
5.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 102





### Ⅲ

##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I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한다.

### 기 본 방 향

#### □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 육성

- (기업혁신특구 도입) 대학, 철도역사 등 지방도심에 산업, 문화, 주거 등과 융복합된 저렴한 기업입주공간 조성 추진
- (산업경쟁력 강화) 대학 내 첨단산단(캠퍼스혁신파크) 조성, 노후산단 재생, 신산업 연계 국가산단 조성 등을 통해 혁신기반 구축
- (새만금) 환황해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변도시 통합개발 계획을 수립(20.10,개발+실시계획)하고 착공(20.12)으로 조성 본격화
- (행복도시·제주) 바이오·헬스 혁신 플랫폼 조성전략(세종), 제2첨단 과학기술단지(제주) 등 신성장 동력확보 및 지역성장기반 구축
- (해안·내륙권) 권역별 핵심사업을 발굴하여 해안내륙권 발전종합 계획(5개 권역) 변경,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사업(2건) 추진
- (도시재생뉴딜 지역거점) 예산 규모(연 국비 1조) 변화 없이, 기존 공모사업 비중은 줄이고, 혁신지구, 총괄관리사업자 등 新사업 확보
- (쪽방촌·빈집 등 정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노후·불량 주거지인 쪽방촌 정비방안 마련 등을 통해 주거취약계층 지원
- (도시재생 생태계 육성) 소규모재생사업, 도시재생한마당,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등 지역주민이 도시재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 (혁신도시 시즌2)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계약우대, 지역물품 우선구매 확대 유도 등 이전 공공기관의 기업지원 강화
- (지방공항 개발 추진) 김해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울릉공항, 새만금 공항, 백령도 공항 등 건설을 통해 지방 균형발전 도모
- (정주생활권 모델 마련)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 인접 시·군을 연계한 위계별·기능별 서비스 거점 및 공유생활권 도입
- (생활SOC)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SOC 국가최소기준 마련
- (사업 발굴·지원) 지역 주도의 우수사업(투자선도지구, 지역수요맞춤사업) 발굴, 컨설팅 지원 법제도화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기반 마련
- (스마트 하천관리) 하천 특화기술 탐색, 적용 가능성 검토를 통해 중장기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여 하천분야 전반에 파급효과 유도

□ 품격있는 도시공간 구현

- (건축물에너지)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선도 및 기존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로드맵 마련
- (공공건축 프로세스 혁신) 주민배려 디자인 촉진 등 공공건축의 효율적·체계적 조성을 위한 절차 마련(「공공건축특별법」 제정안 발의)
- (경관관리 선진화) 도시 및 비도시지역에 대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도록 차별화된 경관 관리체계 마련(「경관법」 개정안 발의)
- (한옥건축 확산) 혁신적인 한옥 신기술(10m 대공간 구축공법 등)의 공공건축 선도적 적용을 통한 민간영역 확대 기반 마련

- (건축행정혁신) 건축심의 대상 합리적 조정, 건축안전센터의 건축허가 관련 확인업무 범위 확대 등 건축허가제도 개선 추진
- (용산공원 개방) 미군으로부터 기반환받은 부지(장교숙소 5단지)에 담장·진출입로 공사 등을 거쳐 역사상 최초(117년만)로 대국민 개방
- (장기미집행공원) '19.5월 마련한 대책에서 목표한 우선관리지역 130km<sup>2</sup> 보다 50% 이상 증가한 200km<sup>2</sup> 이상의 공원조성·보존 추진
- (개발제한구역 조정) 향후 20년간 도시의 균형성장, 환경보전 등을 위해 GB의 공적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GB 조정·관리방향** 마련

(1) 주요내용

□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도시재생 생태계 육성

- 도시재생 거점대학 석·박사 교육,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확대, 청년 인턴십 확충(600명), UN-HABITAT 지역청년 파견\* 등
- 청년 창업, 벤처기업, 소규모 민간재생 등 금융 지원
  - 창업·사업에 기금 등 지원(도시재생 모태펀드 조성·운영, 수요자중심형 융자), 공간지원리츠(공공임대·공공상가 공급), 어울림센터 조성·운영 등
- 공공 참여 가로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공모 등을 통해 공공시행 가로주택사업지 발굴 후 정비 착수(시범사업)
  - \* 공공성 요건 충족 시 사업시행구역을 최대 1만→2만m<sup>2</sup>까지 확대(빈집법 시행령 개정)
- 빈집 밀집지역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자율) 시 기금 지원 등
  - \* (한도) 총 사업비의 50%(공적임대 20% 공급 시 20%p, 공공참여시 20%p 추가) / (금리) 1.2%
- 붕괴가 우려되는 노후아파트 긴급 정비사업(서울 영등포)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제도(국비 50억원)와 연계하여 정비 추진

□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 발전재단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 조성 의무화 및 발전 재단 출연 근거 마련(혁신도시법 개정, '20.11월)
  - \*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활용하여 조성, 전북은 35억원 既조성
-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문화·체육·보육 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
- '20년 복합혁신센터 7개소 착공(경남, 울산, 제주 등)

## □ 공항 혁신 통한 주변연계 개발

- 공항중심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특화 산업과 도시계획을 연계한 공항 주변개발 계획을 마련하고 시범실시 추진
  - 소음피해가 심한 구역(85웨클 이상)의 피해 인구 최소화를 위해 산업 용지, 물류창고 등 지역산업의 거점 기반으로 조성 추진
- 한국형 스마트공항 모델 구축 등 해외공항 개발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G2G, PPP 등 핵심사업 수주 집중 지원\*
  - \* 팀코리아 구성하여 전략컨설팅, 금융지원, 정보공유, 민관 동반진출 등 지원

## □ 기업혁신특구 도입

- 대학, 철도역사 등 지방도심에 산업, 문화, 주거 등과 융·복합된 저렴한 기업입주공간 조성 추진
  - 공간환경 개선 및 창조공간 조성방안, 인센티브 제공방안, 선도 사업 추진방안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 수립(6월)

## □ 미래건축 기반 마련

- (공공건축 프로세스 혁신) 주민배려 디자인 촉진 등 공공건축의 효율적·체계적 조성을 위한 절차 마련(「공공건축특별법」 제정안 발의)
- (건축규제 개선) 건축허가 시 각종 심의·인증 등의 중복, 불합리한 운영 등으로 국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건축허가제도 개선을 추진

## □ 친환경 녹지공간 마련

- (장기미집행공원) '19.5월 마련한 대책에서 목표한 우선관리지역 130km<sup>2</sup> 보다 50% 이상 증가한 200km<sup>2</sup> 이상의 공원 조성·보존 추진
- (개발제한구역) GB 조정·관리 방향에 대한 정부 내 공감대 형성 및 2020 해제물량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GB 수립지침 개정 추진

## (2) 성과지표

###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19	'24			
㉠ 수도권 인구집중도 (%)	49.43	49.50	49.60	49.78	50.00	50.5	수도권 인구집중 통계청 추계치* ('19.6)를 감안해 목표치 설정 * '20년 50.1 → '25년 50.7	서울+경기+인천 주민등록인구 / 전국 주민등록인구 (외국인 제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

###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19	'20	'21	'22
<b>I-1. 지역경제를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한다.</b>					
㉠ 지역경제활성화 및 균형발전정책 추진율	-	-	100%	-	-
㉡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정지원 확대	95%	99%	99%	-	-
<b>I-2. 지역균형발전 인프라를 확충한다.</b>					
㉠ 혁신도시 일자리 창출 (명, 누적인원)	12,339	15,076	17,813	-	-
㉡ 공항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평가	만족	만족	만족	-	-
㉢ 미래여건 대응 국토전략 마련	-	-	100%	-	-
<b>I-3. 품격있는 도시공간을 구현한다.</b>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건수	-	-	150	-	-
㉡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위한 업무 절차 기준 마련	-	-	제정안 상임위 상정	-	-

##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도시재생뉴딜) 도시재생뉴딜 지역은 쇠퇴한 지역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정부재정 지원 외에 민간투자 부족

-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해당 지역 거점을 개발하는 거점형 도시재생 사업을 도입하여, 국가 재정뿐만 아니라 민간(공공) 투자 확대 도모

- (발전기금 조성) 정부는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의 일부를 혁신도시 발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지자체는 반대\* 입장
  - \* 혁신도시는 정주여건이 갖춰진 곳으로 다른 지역에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
- (신공항) 김해, 제주2, 흑산 공항 등 신공항 건설을 추진 중이나, 주민, 지자체, 환경단체 반대 등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
  - 지자체,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쟁점과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주민 상생방안 마련 등 사업정상 추진노력 지속
- (공공건축) 형식적인 공공건축 업무가 관례화된 발주기관이나 건축사들은 특별법에 규정될 디자인 업무절차에 대한 반대 가능성 상존
  -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에 대한 각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공감대를 형성 하고, 특별법 추진 방향에 대한 설득 및 동참 유도 필요
- (GB 조정관리) 2차 광역도시계획(21~40) 수립과 공공사업 추진 등을 위해 GB 해제물량 설정 등이 불가피하나, 추가 해제에 대해 환경단체 등의 반대 예상
  - 전문가, 지자체, 환경단체 등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후 추진



## (1) 주요 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거점 확산 및 산업기반 혁신
  - (기업혁신특구) 대학, 철도역사 등 지방도심에 산업, 문화, 주거 등과 융복합된 저렴한 기업입주공간 조성 추진
  - (산업경쟁력 강화) 대학 내 첨단산단(캠퍼스혁신파크) 조성, 노후산단 재생, 신산업 연계 국가산단 조성 등을 통해 혁신기반 구축
  - (새만금) 환황해 경제거점 육성을 위해 수변도시 조성을 본격화 하고, 육상태양광 선도사업 착공과 투자진흥지구 도입으로 투자유치 본격화
  - (행복도시·제주) 바이오·헬스 혁신 플랫폼 조성전략(세종), 제2첨단 과학기술단지(제주) 등 신성장 동력확보 및 지역 성장기반 구축
- 도시재생 뉴딜을 통한 지역 거점 조성
  - 예산 규모(연 국비 1조) 변화 없이, 기존 공모사업 비중은 줄이고, 혁신지구, 총괄관리사업자 등 실행력 높은 新사업 선정 주력
    - 공모사업은 50곳 내외를 선정하고, 선정권한을 광역지자체에 위임
    - \* 중앙은 실태평가, 적격성 검증 등으로 선정 절차 관리 강화
    - 공공기관 주도로 지역 거점을 구축하는 혁신지구, 총괄관리사업자 사업 15곳을 포함하여 신규 사업을 약 70곳 선정

## (2) 세부 추진계획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거점 확산 및 산업기반 혁신
  - (기업혁신특구) 대학, 철도역사 등 지방도심에 산업, 문화, 주거 등과 융·복합된 저렴한 기업입주공간 조성 추진

- 공간환경 개선 및 창조공간 조성방안, 인센티브 제공방안, 선도사업 추진방안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 수립(6월)

○ (산업경쟁력 강화) 대학 내 첨단산단(캠퍼스혁신파크) 조성, 노후산단 재생, 신산업 연계 국가산단 조성 등을 통해 혁신기반 구축

- 캠퍼스혁신파크는 '19년 선정한 선도사업\*의 단지지정 및 설계를 완료하여 연내 1곳 이상 착공(12월)하고, 금년 신규사업\*\* 선정도 추진

\* 강원대(강원 춘천), 한남대(대전), 한양대(경기 안산) 등

\*\* 기업 지원사업은 교육부·중기부와 협업하여 기업입주(22년)와 함께 본격 가동 추진

○ (새만금) 환황해 경제거점 육성을 위해 수변도시 조성을 본격화 하고, 육상태양광 선도사업 착공과 투자진흥지구 도입으로 투자유치 본격화

- 육상태양광 선도사업(0.1GW)을 착공('20.11)하고, 투자진흥지구 도입 등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20.11)

○ (행복도시·제주) 바이오·헬스 혁신 플랫폼 조성전략(세종), 제2첨단 과학기술단지(제주) 등 신성장 동력확보 및 지역성장기반 구축

-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건립 지원, 공동캠퍼스 조성('24 개교)을 위한 입주대학 공모 등 대학·기업 유치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강화

- 신화역사공원 등 기존사업 완성도 제고와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 서비스센터 착공('20.5),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실시계획 수립('20.11) 등

#### □ 도시재생 뉴딜을 통한 지역 거점 조성

○ 예산 규모(연 국비 1조) 변화 없이, 기존 공모사업 비중은 줄이고, 혁신지구, 총괄관리사업자 등 실행력 높은 新사업 선정 주력

○ 공공이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 원도심의 도시 재생을 촉진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 (5곳)

○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재생효과 극대화 (10곳)

-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內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추진되는 점 단위 도시재생사업
- 전국에 추진중인 뉴딜사업(284곳)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차장, 마을도서관, 돌봄시설 등 **생활SOC**를 약 300개 연내 공급

###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코로나 19에 따른 실물경기 하락과 맞물린 국토 전반적인 경제활동 위축 특히 지역경제는 산업기반 부족에 따른 혁신적 개편 요구
  - 인구와 경제력의 약 90%를 차지하는 도시지역의 사회·경제·물리적 쇠퇴가 심각(전국 읍·면·동 중 68.2%, '18년)
    - \* (전국 3,500여개 읍·면·동 중 쇠퇴지역 현황) '13년 2,239개 → '18년 2,389개
- 지역은 인구감소와 경제활력 저하로 어려운 시기 보내고 있어, 일자리, 생활 SOC 등 지역활력 제고가 가능한 정부의 역할 기대
  - 행복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와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요구되고 있고, 산업은 부처 간 칸막이가 없는 전폭적인 지원 요구 증가
  - 도시재생뉴딜지역은 쇠퇴한 지역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정부재정 지원 외에 민간투자 부족
- ☞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갈등발생 소지 및 부처 협조 필요과제는 협업체계 구축 및 추진상황 점검을 강화**

## (1) 주요 내용

## □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확대

- 의무채용 기관 확대, 대전·충청권 광역화 등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도모(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 '20.5월)
- 또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이전 공공기관의 인력·시설을 활용한 실무·현장 중심 교육과정(오픈캠퍼스) 확대('20.12)

## □ 공항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 연계

-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완료 후 기본계획 고시, 설계 착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신공항 연계 항공, 물류 등 특화기능 개발 추진
- (기존공항) 김해·제주공항 시설개선, 대구 민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 인천공항 4단계 및 무안·광주공항 통합 지속 추진
- \* (김해공항) 주차빌딩 신축, 임시터미널 신축 / (제주공항) 관제탑 신축 등

## □ 국토전략 마련 및 안전 제고

- (미래정주권구상) 저성장·인구감소에 부합하는 정주 생활권 모델을 구상하고, 일상생활에서 공공서비스 보장을 위해 생활SOC 최소기준 마련
- (수도권 정비계획) 균형발전, 국가경쟁력, 수도권내 낙후지역 등을 고려한 수도권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안)마련
- (스마트 하천관리)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빅데이터·드론·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 통합, 기능개선 등 하천관리의 고도화 추진

## (2) 세부 추진계획

### □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확대

- 의무채용 기관 확대, 대전·충청권 광역화 등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도모(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 '20.5월)
-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이전 공공기관의 인력·시설을 활용한 실무·현장 중심 교육과정(오픈캠퍼스) 확대('20.12)
- (발전기금 조성) 발전재단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 조성 의무화 및 발전재단 출연 근거 마련(혁신도시법 개정, '20.11월)
  - \*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활용하여 조성, 전북은 35억원 既조성

### □ 공항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 연계

- (김해신공항) 現 김해공항은 항공수요 급증에 따라 용량이 한계에 도달하여 조속히 신공항 건설 필요
  - \* 현재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 용량은 156%, 활주로 용량은 94% 포화
  - \*\* 부울경에서 국토부계획은 안전·소음, 관문공항 기능이 불가하다며 백지화·정책변경을 요구('19.4)함에 따라 총리실에서 검증중('19.12~)
  - 주요 쟁점에 대한 철저한 자료분석, 전문가 활용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총리실 검증을 조속히 완료 추진
- (제주 제2공항) 충분한 지역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갈등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주민 상생방안 마련 및 연내 제2공항 착수 기반 마련
- (울릉 공항) 지난해 총사업비 등 사업 지연요소가 해소된 만큼,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올해 공사 착공 추진
  - \* 실시설계('19.12~'20.3) → 관계기관 협의 → 공사계약·착공('20.9) → 준공('25)
- (새만금 공항)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19.1, 예타면제)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등 신속한 후속절차 추진

- (백령도 공항) 백령도 주민 이동권 개선을 위해 건설을 추진하며, 예타 신청 및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서 추진계획 구체화
  - \* 흑산공항은 공원위 심의 재개에 대비하여 수요, 환경 등 쟁점 보완 지속 추진

□ 국토전략 마련 및 안전 제고

- (미래정주권구상) 한국형 콤팩트-네트워크 생활권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저성장·인구감소에 부합하는 국토 공간구조 재편방안 모색

\* 전문가 의견수렴,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국 여건에 부합하는 모델 설계

- (수도권 정비계획) 지역간 첨예한 대립 등이 예상되어 단계별로 충분한 연구\*와 이해관계자간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안) 마련 추진('20.12)

\* (1차, '18.5~'19.5) 현황·여건 분석, (2차, '19.5~'20.5) 계획안 검토, (3차, '20.5~) 절차이행

\*\* 지자체, 연구원, 관계부처 등과 연구현황 공유, 의견수렴 등 지속 추진

○

- (스마트 하천관리) 상습적인 내수침수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최신 ICT기술을 적용한 배수시설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 종합상황실 구축, 원격제어 설비 도입, 배수시설 현대화를 위해 14개 시·군·구, 282개 배수시설에 국비 200억원을 지원

\* '25년까지 모든 국가하천 수문에 단계적으로 구축(총 3,580개소, 약 4,000억원 소요)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기존공항) 공항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 지원사업 등을 시행 중이나, 소음·고도제한 등에 따른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갈등 지속

\* 소음대책사업 시행 공항(6개) : 김포, 제주, 김해, 울산, 여수, 인천

- 또한, 지속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증가하고 있는 드론, 조류충돌에 의한 안전 위협이 대두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조치 요구

- (외부환경) 인구·산업·일자리 등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하고, 저성장,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등 국토를 둘러싼 여건변화의 가속화

## (1) 주요 내용

## □ 미래건축 기반 마련

- (그린뉴딜) 코로나19로 높아진 건물의 안전성·쾌적성 확보 필요성 등 그린뉴딜 대응을 위한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로드맵 마련
- (경관관리 선진화) 도시·비도시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관 관리 체계와 4차산업 신기술(VR, AR 등) 및 3차원 공간정보 활용방안 마련

## □ 국민과 함께하는 용산공원 조성 및 친환경 녹지공간 마련

- (용산공원)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경계를 확장하고 미군으로부터 기반환받은 부지(장교숙소 5단지) 역사상 최초로 대국민 개방

## (2) 세부 추진계획

- (그린뉴딜) 코로나19로 높아진 건물의 안전성·쾌적성 확보 필요성 등 그린뉴딜 대응을 위한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로드맵 마련
  - 또한, 공공 어린이집, 보건소 등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의 환기시스템, 에너지성능 등을 개선

\* (사업대상)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

-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20), 다양한 유형의 실증사업 착수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한 제로에너지건축 본격 확산
- (경관관리 선진화) 도시 및 비도시지역에 대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도록 차별화된 경관 관리체계\* 마련(「경관법」 개정안 발의)

\* 도시지역은 국민편의 증진 및 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의절차 간소화, 비도시지역(도농접경부 등)은 관리 강화를 위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선정

- 과학적인 경관심의회와 실효성 있는 경관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4차산업 신기술(VR, AR 등) 및 3차원 공간정보 활용방안\* 마련

\* 예) 3D 시가지 이미지를 경관심의회, 경관자원 조사 및 계획수립 등에 활용

#### □ 국민과 함께하는 용산공원 조성 및 친환경 녹지공간 마련

- (용산공원) 116년간 외국군의 주둔지였던 용산기지를 생태·문화·역사가 공존하는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조성기로 발표('03)

- 공원계획 발표 이후 미군 이전이 지연되면서 담보상태에 있었으나, '19.12 기지반환을 개시함에 따라 본격적인 공원조성 여건 마련

- (장기미집행공원) '20.7월 20년만에 공원일몰제가 도래함에 따라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364km<sup>2</sup> 공원부지가 실효 위기

- '18.4월, '19.5월 두 차례에 걸쳐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 중에 있으나 여전히 실효 위기에 있는 공원시설이 존재

- (개발제한구역) GB의 조정원칙을 규정한 1차 광역도시계획\*이 종료('20)됨에 따라 2차 광역도시계획('21~'40)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시점

\* 광역 지자체 간 공간구조·기능의 상호연계, 환경보전, 광역시설 정비를 위해 마련하는 2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GB 조정원칙 및 해제물량을 규정

###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무화) 제로에너지건축물 요소기술 개발·보급 확대, 기업 지원, 인력 육성 및 다양한 대국민 홍보활동

- (용산공원) 용산기지 반환절차가 코로나 사태, 한미 간 협상 난항 등으로 지연되고 있어 용산공원 조성 추진에 어려움

- 용산기지 조기반환을 위해 미측과 지속협의를, 관계기관 및 국민 대상 다양한 행사 개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조성계획 수립



기 본 방 향

□ 미래도시 조성 가속화

- (국가 시범도시 본격조성) 스마트시티 챌린지 신규사업을 공모하고 '19년 선정된 예비사업 중 우수사업을 선정해 본사업 착수
- (해외협력)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을 위해 올해 최초 정부 간 협력(G2G)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도입
-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설립) 적극적인 해외사업 발굴 및 수주 지원을 위해 해외 현지에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설립
- (수소마스터플랜) 시범도시 지역 여건을 고려, 수소 활용 혁신기술과 지역특화산업을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
- (수소 시범도시) 시민체감형 수소경제 확산 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수소 관련 연계사업을 시범도시 지원

□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차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를 지정하여 여객·화물 유상서비스 실증 및 無핸들·無페달 차량 운행 허용
- (부분자율주행 제도완비) 자동차손배법, 자동차관리법 및 법령 개정을 통해 보험·안전성검증 제도 마련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 (통신인프라 전국구축 준비) 사전타당성조사 등 C-ITS 전국확산을 위한 사업성을 확보하고 미정인 국내 C-ITS용 V2X통신방식\*을 결정

□ 스마트건설 확산 및 건설기술산업 활성화

- (상용화 기술 현장적용 확산) 기술별 핵심 시범사업 추진 및 성과확산
- (성과 가시화 및 붐-업)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 기술을 시연하여 경쟁하는 경연대회인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0” 개최
- (미래 핵심기술 확보) 미래기술 확보를 위해 스마트건설R&D착수 및 스마트유지관리R&D 예타 등 초대형R&D 연속추진

□ 해외투자개발사업 확대

- (금융경쟁력 강화) 플랜트(P)·인프라(I)·스마트시티(S) 수출 지원을 위한 PIS 펀드(1.5조원 목표)를 조성하여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
- (G2G 사업)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라과이 등에서 정부 간 협력 (G2G)을 통해 투자개발사업의 우리기업 사업권 확보를 지원
- (민·관 협력기반 구축) 정부간(G2G) 주요인프라 사업화·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G2G 정례협의체를 신설, Team Korea 진출지원
- (신남방) ASEAN 정상외교 후속조치를 통해 가시적 협력성과 도출

□ 제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인프라 조성

- (디지털트윈 기반) 3차원 공간정보 기반의 현실과 똑같은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해 정책·제도, 기술, 서비스 기반 마련
- (국토관측위성 발사) 재난·재해 대응, 국토·자원 관리, 해외 지도 제작 등을 위하여 국토관측위성 개발 (과기부 공동)
- (지적불부합 해결 촉진) 지적재조사 추진절차 개선을 통한 사업 기간 단축, 도시재생사업 등 타 사업과의 협업을 통해 파급 확산

□ 항공산업의 성장동력 지원

- (신기술 인증체계) 국내업체는 개발 초기단계이나, 신기술 항공기의 연구·개발 시험비행 지원을 위한 신기술 특별감항증명 절차 마련
- (종사자 보호) 팬데믹 수준 감염병 대비 항공사 비상대응계획 및 승무원 감염병 대응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 (사업용조종사 양성) 항공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양질의 조종사를 적기에 수급토록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사업용조종사 양성 지속추진

□ 건설혁신 성과 가시화 및 건설 일자리 질 개선

- (종사자 보호) 코로나19 긴급지원대책과 현장관리 강화를 통하여 건설산업의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200만 종사자 보호강화
- (전문 대업종화) 유사 전문업종을 통합하여 불요불급한 업종 간 분쟁을 줄이면서, 실적·기술력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쟁 유도

□ 공간정보 산업 육성 및 생태계 강화

- (창업·생존 기업 지원) 잠재력 있는 창업·도약 기업을 발굴하고, 장기적 생존과 시장진출을 단계적 지원
- (산업 생태계 분석) 공간정보 기업 고용·경영 현황(사업체·종사자 수, 매출액, 영업이익 등)과 기업 간 연관성, 생태계 분석

(1) 주요내용

□ 스마트시티 확산 및 성과 본격화

- 챌린지 신규 공모를 통해 기존도시 스마트화를 확산, 예비사업 선정 지역의 본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성과 가시화

□ 자율차 인프라 구축 및 산업생태계 조성

- 5개 지역에 C-ITS 시범·실증사업 추진 및 C-ITS 전국확산을 위한 사업성 확보, 정밀도로지도를 '24년까지 전국 국도까지 확대 구축
- 산업발전 협의회를 확대발전시켜 기업간 협업·교류 활성화 및 미래차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설명회·포럼 등 추진

□ 스마트 건설 기업 적극 육성 및 연구개발 투자

- 스마트건설 지원센터 2센터 건립 등 통해 스마트건설기업 육성
- 스마트건설R&D(약 2천억원, '20.4 착수) 및 스마트유지관리R&D(4천억, 예타대응) 등 초대형R&D를 연속 추진하여 미래 핵심기술 조기 확보

□ 4차 산업혁명의 국토교통산업 혁신

- 전주시 디지털 트윈('19년, 12개 세부모델 구축)에서 시민맞춤형 서비스 시범운영('20.11월~), 기업 참여로 신사업 발굴
  - 디지털 트윈 등 수요에 맞춰 전국 3D 지도 구축을 위한 '건물·도로·지형' 3D지도\* 시범구축(여의도·대구시 / '20.7월, 2억원)
- 잠재력 있는 창업·도약기업 지원 및 산업현장에 필요한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 국산 공간정보 S/W 활용 확산\*

\* 전국(시군구, 228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GIS엔진 국산화(목표 : 75%)

□ 포스트 코로나19 항공산업 활성화

-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스마트공항 고도화, 인바운드(외국인 방문객) 활성화, 항공금융 등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 매출급감·고용 불안정 등으로 위기에 놓인 항공업계에 각종 시설사용료 감면, 금융 지원, 사업권 보장, 고용유지 등 지원방안 마련·시행

□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보강

-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극복을 위한 긴급지원대책 실시, 건설산업과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 등 추진

□ 신기술을 통한 공간활용 제고

- 블록체인 적용으로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를 위한 플랫폼 개발 BPR/ISP 추진, 지적재조사 체계 개선 및 사업 확산
- 굴착,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지하공간 3D 통합지도 정확도 개선방안 마련 및 구축 확대 ('19 : 10개→'20 : 27개 市)
- 관련 시스템을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하안전 관리 활용을 추진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19	'24			
① 국토교통분야 취업자 수 (천명)	3,832	3,793	4,019	4,121	4,159	4,159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추세에 따른 고용감소 요인을 극복하여 5개년('20~'24) 동안 '19년 취업자수(4,159천명) 수준 유지	통계청-지역별 고용조사 자료 중 국토교통부 소관 업종의 취업자수 합산 (소분류 기준 : 건물 건설업, 육상 여객 운송업 등 22개 업종)	통계청-지역별 고용조사 통계 (매년 4월 발표) 발체
②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평가결과 (점수)	73.8	77.8	74.0	71.0	71.7	74.0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른 해외 수주 영향으로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은 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나, 건설역량은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에 따라 '25년경에는 기술 선도국가에 진입할 수 있도록, 스마트건설 기술 수준을 6%p 이상 상향 반영	국가별 건설인프라 경쟁력과 국가별 건설역량 상대평가 점수를 가중평균 (건설인프라경쟁력 점수*0.4+건설역량 점수*0.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평가" 결과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19	'20	'21	'22
<b>II-1.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한다.</b>					
㉠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추진	-	-	시범도시 착공	-	-
	-	-	스마트 시티 확산	-	-
㉡ 자율차 하위법령 제정 및 법 시행	-	법 제정	하위법령 제정 및 법 시행	-	-
㉢ 투자개발사업 수주 확대(수주액)	12억\$	18억\$	20억\$	-	-
<b>II-2. 국토교통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산업을 혁신한다.</b>					
㉠ 데이터 기관간 양방향 연계	-	8개	9개	-	-
㉡ 공공분야 드론활용 제고 (드론기체 보유 규모)	-	2,951대	4,000대	-	-
㉢ 건설현장 체불근절(체불액)	92억	0원	0원	-	-
㉣ 창업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실적	-	-	50회	-	-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스마트 건설) 이미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큰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은 새로운 기술 개발·적용 확대 등 지속 노력하고 있어 기술 경쟁력 격차를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
- (지하공간정보) 시설물 관련 정보를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유하여야 하나, 보안규정에 따라 공유·활용 제약
  - 철저한 보안대책,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공유 추진
- (건설업 수요위축) 수요 리스크(신규발주 감소, 대금지연 등)와 공급사 신용경색 (자금조달 곤란, 금융비용 증가 등)이 중첩되어 급속한 경기위축 우려
  -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면서 단계별 정책 패키지를 중심으로 대응방안(contingency plan)을 사전 수립, 차질 없이 추진

## (1) 주요 내용

## □ 혁신성장 산업을 이끄는 미래도시 조성

- SPC 출자에 참여할 민간기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 스마트빌리지 착공(부산), 스마트퍼스트타운 기본계획 수립(세종)
-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을 위해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도입하고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설립 통해 해외수출 지원

## □ 자율차 산업육성 및 확산기반 조성

- 여객·화물 유상서비스 실증 및 無핸들·無페달 차량 운행 허용 등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사업화 지원,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등 추진
- 자율차의 안전기준 적합성 검증체계 마련 및 사고 시 원인규명 등을 위한 사고조사위 설치, 레벨4 연구개발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제 개선

## □ 스마트건설 확산 가속화

- 상용화 기술별 핵심 시범사업 추진, 스마트턴키 발주 확대 및 현장 시연 경연대회 등을 통해 현장적용을 확산하고 붐-업 유도

## □ 위축우려가 큰 해외건설 산업에 대한 총력대응

- '19년 수주액이 '06년 이후 최저치(223억불) 기록,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에 따라 시장위축 가속화 우려
- 단순 도급에서 탈피, 투자개발사업으로 해외진출 패러다임을 개선하고 인프라 외교에 기반한 수주지원 및 피해 최소화

## (2) 세부 추진계획

### □ 혁신성장 산업을 이끄는 미래도시 조성

- (부산 시범도시) 혁신서비스의 선제적 체험이 가능한 실험공간 조성을 위해 스마트빌리지\* 착공 및 빌리지 내 특화서비스 선정
  - \* 수열에너지, 단지내 로봇 택배 및 스마트홈 등 다양한 혁신기술을 단지 내 구현
- (세종 시범도시) 다양한 혁신기술 실증 등이 가능한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 스마트퍼스트타운\* 기본계획 수립 및 부지조성 착공
  - \* 핵심 앵커시설 + 지원시설 + 실증사업으로 구성, 시민과 기업의 참여 및 체험이 가능한 Town으로 조성
- (K-City Network)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을 위해 올해 최초 정부 간 협력(G2G)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도입
  - 국제공모를 통해 아세안·중남미 등 해외도시에 한국형 스마트시티 계획수립\*, 초청연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협력사업(11개) 선정 및 착수
  - \*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MP) 수립 또는 타당성조사(F/S) 지원

### □ 자율차 산업육성 및 확산기반 조성

- 여객·화물 유상서비스 실증 및 無핸들·無페달 차량 운행 허용 등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사업화 지원,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등 추진
  - \* 위원회 구성(5월) : 국토부장관, 국토부·기재부·과기부·경찰청 차관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총 9인, 정부위원5, 민간위원4)
  - \*\* 지구지정(11월) : 신청이 들어온 지자체 대상으로 운영계획서 검토, 지정기준 적합여부 판단 등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 \*\*\* 시연회(12월) : 민간업체의 서비스 실증착수 시점에 맞춰 행사개최
- (부분자율주행 제도완비) 자동차손배법, 자동차관리법 및 법령 개정을 통해 보험·안전성검증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적 수용성 제고도 추진
  - \* 윤리적 판단을 시스템(AI)이 대체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윤리적 판단의 기본 가치·원칙을 제시하는 윤리가이드라인 제정



- (완전자율주행 선제적준비) 레벨4 자율차 제작가이드라인\* 마련을 시작으로 안전기준 제도화(~'24) 추진 및 연구·시험목적 운행 확대
  - \* 제작사 준수 의무는 없으나 통상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기술기준(행정규칙) 제정

#### □ 스마트건설 확산 가속화

- 성과 공유·확산, 투자촉진, 산·학·연·관(발주청) 전문가와 투자사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스마트건설포럼 운영('20.7 발족)
- 기업 사기 진작을 위해 매달 기술산업 동향과 '이달의 기업'을 선정·소개하는 "월간 스마트건설 Report"을 발간('20.7~)하고
- 스마트턴키 발주 확대(1건 → 6건) 및 턴키입찰시 스마트건설기술 평가비중 확대(3% → 15~25%, 9월 건진법 운영규정 개정)
- 기존 2-D설계 병행단계를 넘어 BIM(3-D 건설모델링)으로만 설계하는 BIM 전면설계 확대(도공, '19년 1건 → '20년 3~4건, 전체물량 대비 50%)

#### □ 위축우려가 큰 해외건설 산업에 대한 총력대응

- (금융경쟁력 강화) 플랜트(P)·인프라(I)·스마트시티(S) 수출 지원을 위한 PIS 펀드(1.5조원 목표)를 조성\*하여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
  - \*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민·관 공동으로 '19년부터 조성 중
- (민·관 협력기반 구축) 정부간(G2G) 주요인프라 사업화·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G2G 정례협의체를 신설, Team Korea 진출지원(4월~)

###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사업구조가 복잡(서비스 개발+공간조성)하고, 장기운영(15년 이상) 리스크 등으로 기업의 대규모 투자결정 어려움
  - 공모관련 기업 간담회, 개별기업 면담 등을 통해 참여를 이끌어내고, 기업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전략\* 보완 등 추진

\*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사항과 형평성 논란 없는 토지공급(선도지구), 공정한 평가방식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RFP 수립

□ (자율차 산업육성) 국제기준 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어 국제 회의체(WP.29)를 통해 미·EU·일·중 등 주요국과 의견조율 필요

- C-ITS는 V2X통신을 활용하는 지능형 교통체계(ITS)로 교통안전·국내현황·기술수준·국제표준·주요국 정책동향 등을 고려한 결정 필요

□ (스마트 건설) '건설 생산체계'와 '일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 변화 가속화

\* (예) 프리패브(Off-Site Construction) 확대 : 中 모듈러 방식으로 1.3만 병상공급  
건설자동화 : 건설기계 통제기술 적용(D사), 다관절 산업로봇 도입(H사)

○ 건설기술 분야는 시공 분야에 비해 글로벌 경쟁력 미흡한 실정으로 보다 근원적인 활성화 시책 필요

□ (해외건설 수주) 코로나19에 따른 입국제한, 국제유가, 정세 등 외부 환경에 따라 발주 규모와 발주일정 등의 변동이 커진 상황

○ 대외여건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안에 대해서는 외교부, 재외 공관, 공기업 등과 공동 대응(장관급 회의체 활용 등)

## (1) 주요 내용

## □ 건설데이터 개방 확대

- 행정 지원용으로 사용하던 공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민간 개방 (최초),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연계 기관\*\* 확대

\* 빅데이터 플랫폼 기능 개선, 시범운영 및 본격 서비스('20.5)

\*\* 공간정보 구축·관리 기관 간 MOU 체결 등으로 연계데이터 확보

## □ 드론 산업 활성화

-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드론 특화도시 구현 등 혁신성장 가속화 필요

## □ 건설산업의 고질적 병폐 개선

- 업역·업종 개편을 통해 비효율적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임금보장 강화, 페이퍼컴퍼니 퇴출 등 공정산업으로 체질 개선

## □ 공간정보 산업역량 강화

- 잠재력 있는 창업·도약기업 지원 및 산업현장에 필요한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 국산 공간정보 S/W 활용 확산\*

\* 전국(시군구, 228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GIS엔진 국산화(목표 : 75%)

## (2) 세부 추진계획

## □ 건설데이터 개방 확대

- (공간정보 품질 통합관리)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공간정보의 품질 진단을 통해 공간정보 전반의 품질 향상 도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일환으로 '19년부터 추진

\* 국토부 : 공간정보 부문 담당 / '19년 : 시범운영, 10개 중앙부처 22개 시스템

○ (지하공간정보 확충) 지하 안전관리를 위해 지하공간정보 구축 확대 및 정확도 개선, 지하시설물 관리기관 협업 강화 추진

- 금년 27개 市지역에 ‘지하공간통합지도(3D)\*’ 구축(‘15~’20년 52개 市)

\* 상하수도·전력·가스·지반 등 15종 정보 통합 →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에 활용

## □ 드론 산업 활성화

○ (신기술 인증체계) 국내업체는 개발 초기단계이나, 신기술 항공기의 연구·개발 시험비행 지원을 위한 “신기술 특별감항증명 절차” 마련(‘20.9)

○ (수출 지원) 국내 인증 항공부품(항공화물용 팔레트)에 대한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외국 인증당국(FAA)으로부터 부품 인증 획득(‘20.3)

\* 국산 항공부품의 수출 길을 열기 위해 FAA의 인증(설계승인)을 획득해야 해외 수출이 가능, 국내 항공사도 FAA로부터 인증받은 부품을 위주로 활용하고 있어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

## □ 건설산업의 고질적 병폐 개선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지역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부실기업 진입은 차단

-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지역의무 공동 도급’을 차등 적용\*

\* ①지역사업(국·지방도, 산단, 공항 등) : 의무도급40%, ②전국적 사업(도로·철도) : 의무도급20%+추가가점20%, ③턴키 : 의무도급 20%(\*R&D 3건은 적용 제외)

- 우리부 소관 15개 사업을 중심으로 사무실요건 등을 미충족하는 폐이퍼컴퍼니 차단 방안 마련(지침시달 및 입찰공고문 반영, 3월~)

## □ 공간정보 산업역량 강화

○ (인력 양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공간정보 분야 융·복합 인재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 양성

- 특성화교(고교, 전문대, 대학원)에 장학금, 교육 운영비 등을 지원 (총 12억원)하여 공간정보 분야 인재 배출

\* 특성화 고교(1억원/학교), 특성화 전문대학(2억원/학교), 석·박사(700만원 이내/인)

- (국산 S/W 육성) 국내 공간정보 SW 기업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외산 SW를 국산 SW로 대체 개발하고 수요기관 확산 추진
  - 공간정보 SW산업 초창기에 도입되어 100%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전국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GIS엔진 국산화 추진(229개 시·군·구)
  - \* ‘04년 구축 시 외산 SW(ArcGIS, Oracle) 도입·사용 중이나, 외국기업의 독점적 지위로 과도한 유지보수 비용 요구 등 문제점 발생

###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S/W 국산화) 국내 산업 초창기에 도입된 외산 S/W의 시장 선점으로 국내 중소기업 S/W는 시장진입이 어려운 상황
  - 유지비용이 과도한 외산 SW 대비 국산 도입·관리 비용 사전분석, 자체 시스템과 국산SW 호환성 평가 등 지원
- (드론 기술혁신 제약)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도심 항공교통(UAM) 시대 개척을 위한 美·中·유럽 등 각국의 기술선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 국내적으로도 보안 등 이유로 軍에서 도심 내 드론비행을 대부분 제한하고 테러·사고 등 지역주민 우려도 있어 드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에 제약요소
- (건설업계 이해충돌) 업역·업종 등 생산체제 개편은 건설기업의 업무 범위, 공사수주 가능성 등 기업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 업계간 첨예한 이해 충돌
  - 업계 의견수렴을 확대하고, 충분한 대화 등을 통한 단계적 방안 제시 등을 통해 갈등발생을 최소화

전략목표 Ⅲ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기 본 방 향

□ 주거복지로드맵 중장기 계획 마련

- (계획 연장) 로드맵 이후 발굴 신규부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포함하여 공급계획을 '25년까지 확장(현행 年21만호 공급규모 유지)
- (제도개선) 기존 복잡한 임대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임대료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관점에서 개선
- (공적임대) 청년 맞춤형주택 4.3만호, 신혼부부 맞춤형주택 5.2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 3만호 사업승인 및 고령자 맞춤형주택 1만호 공급 추진
- (쪽방촌 정비) 쪽방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지역주민을 위한 행복주택, 종합복지센터 등 공급 방안 발표
- (사업자 관리강화) 등록임대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설립하고, 전국 단위로 의무위반 임대사업자 합동점검 추진

□ 공적주택 지속 공급기반 마련

- (수도권 30만호 공급) '19년 기준 30만호 중 15만호(13곳) 지구지정 완료(신도시급 5곳 중 3곳 完) 등 시장안정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 중
- (신도시 교통) 교통불편이 없도록 입지 발표 시부터 미리 교통대책(안)을 마련, 연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완료 추진
- (미매각 용지 활용)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내 미매각 용지의 용도변경을 통해 수도권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 추진

□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개편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세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동산시장 관리의 전면적인 개선방안 마련
-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 1인가구 증가, 舊도심 쇠퇴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주택공급 기반 지속확보를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 (서민 임차인 보호 및 주거지원) 임대차 신고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임차인 보호 기반이 되는 임대차 신고제를 차질 없이 도입

□ 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

- (정비사업 투명성) 공정 입찰환경 조성, 입찰 공정성 확보, 관리·감독 강화 및 조합점검 매뉴얼 통한 의결방식 강화 등 투명성 개선
- (정비사업 공공성) 상업지역 임대주택 건설의무 신설을 통해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부담금제도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 추진
- (공동주택 성능 제고) 층간소음 관리 강화, 주택성능등급 개선, 부실 시공 차단, 공유주택 정책기반 마련을 통해 공동주택 성능·품질 제고
- (공동주택 거주자의 권리강화) 사용검사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하자관리를 강화하고, 입주초기 입주자 권리·편의를 향상

□ 부동산 시장관리 강화

- (공시가격 현실화) 공시가격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년 공시가격 산정 시 시세 반영률 제고 및 불균형성의 과감한 해소를 추진
- (부동산 조사기구 설치)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부동산 범죄 수사 등 조사·단속활동 추진

- (택지공급)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를 축소, PFV에 대한 전매 허용요건을 강화하는 등 전매 제한을 강화

#### □ 부동산 산업혁신

- (혁신성장 기반조성) 투명한 부동산시장 구축 등을 포함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프롭테크 육성, 스타트업 기업 발굴·육성 추진
- (리츠산업의 체계적 육성) 자기관리리츠 활성화방안 마련, 자산 운용위탁 업무 허용, 리츠 공모제도의 개념 재정립 등 추진
- (기존 부동산 산업 질 향상) 감정평가산업 발전방안 마련, 중개법인 역량강화 방안 마련,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교육 지속 유지



(1) 주요내용

□ 주거 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 찾아가는 수요발굴을 통해 쪽방·노후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공임대 이주 등 지원하고, 쪽방촌 정비 등 낙후주거지 재창조
- 지역맞춤 정책개발·선도지자체 지원 등 지자체 주거복지 역량강화, 등록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여 임차인 권리보호
- 도심내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하고, 수십년간 방치되었던 쪽방촌의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추진

□ 공공주택 공급혁신

- '25년까지 중장기 주거복지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기존 복잡한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 입주자격·임대료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관점에서 개선
-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17.11월)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18.7월) 발표하여 공공주택 공급 추진

□ 안정적이고 선진화된 주택시장 관리

- 해외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대출규제·세제를 분석하여 시장관리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통계지표도 정밀하게 개선
- 임차인 보호기반이 되는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대상을 단독·다가구주택 세입자까지 확대
  - 청년·신혼부부 등 26.2만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금융 지원

□ 정비사업 투명성·공공성 제고

- 주택정비사업 시공사의 위법적 과열경쟁을 방지하여 입찰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합 합동점검도 지속 시행
-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설을 확대하고, 환수된 재건축부담금은 주거복지가 열악한 지자체에 배분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

□ 거주자 중심 주택 건설 및 관리

- 공동주택 품질제고를 위해 실제 시공 이후 층간소음을 측정·확인토록 하고, 주택성능등급도 거주자 중심으로 개편
- 우수인력이 감리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부실시공 업체는 감리인력을 추가 투입토록 하여 부실시공 및 분쟁 방지

□ 부동산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 프롭테크(propotech) 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자기관리리츠 확대 등 건전한 부동산 금융 활성화도 추진

\* 부동산서비스와 IT기술 등 신기술이 융·복합된 서비스 산업으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급성장 중(투자금액 '13년 5.2억달러→ '18년 39.5억 달러)

- 중개업, 평가업 등 전통적 부동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투명성도 개선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서비스업으로 위상 강화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19				
① 장기 공적임대주택 재고율(%)	5.9	6.3	6.7	7.1	7.6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주택수 증가) 매년 준공 예상 주택 - 매년 멸실 주택</li> <li>* '18년 42.7만호, '19년 36.5만호, 20년 33.9만호, '21~25년은 연 28만호 증가 가정</li> <li>● (장기 공공임대 증가) '18~'25년까지 연평균 12.9만호 공급(재고순증)</li> </ul>	장기공공임대주택수(영구, 50년, 국민, 장기전세, 10년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 총주택수	장기공공임대주택수 : 임대주택통계  총 주택수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② 1인당 주거면적(m <sup>2</sup> )	33.5 (14년 조사치  16년 이전 에는 작성 연도 에만 조사)	33.2	31.2	31.7	32.9	33.7	1인당 주거면적의 '17년도 계량 수치부터 신뢰성을 가지므로 '17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0.3~0.5m <sup>2</sup> )하는 것으로 산정  * '17년도 이전 수치는 객관화된 통계자료가 아니므로(행정자료 미활용), '17년도 이후 통계부 터 비교 시 1인당 주거면적의 점진적 향상을 기대	전국단위가구방문 대면면접조사 (국토연구원 및 한국리서치 연구)  <1인당 주거면적 산정방식> 개별가구의 주택사용 면적(Si)를 개별 가구원수(ni)로 나눈 값의 평균 $\frac{S_1}{n_1} + \frac{S_2}{n_2} + \dots + \frac{S_N}{n_N}$ 주거면적 = $\frac{S_1 + S_2 + \dots + S_N}{N}$ (19년 기준 표본은 61,000여개 가구)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결과 발표내용
--------------------------------	---	------	------	------	------	------	---	--	---------------------------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19	'20	'21	'22
<b>III-1.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을 구축한다.</b>					
① 생애주기별 주택공급 및 주거지원	14.8만호	13.8만호	14.1만호	-	-
② 공동주택 거주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	법령개정 2건	-	-
<b>III-2. 속도감 있는 서민 주거거점을 공급한다.</b>					
① 공적임대 공급	15,761	12,907	1만호	-	-
②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률	8.9 만건	15.6 만건	22.3 만건	-	-
③ 주거취약지역 주거환경 정비	-	-	쪽방촌 지구지정 2건	-	-
④ 30만호 지구지정 및 교통대책 마련	-	13곳 (12차 발표 지구)	6곳 (3차 발표 지구), 5곳 (3기 신도시 전체)	-	-
<b>III-3.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한다.</b>					
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체계 마련	-	-	과 단위 조사기구 신설	-	-
②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63.7%	64.4%	65.2% 이상	-	-

###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공공주택) 1인가구 증가, 고령화 등 주거 관련 트렌드변화 및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거주자 등에 대한 해결책 마련요구 증대
  - 주거복지에 대한 국민·언론·국회 및 학계 등의 관심 증대
  
- (맞춤형 주거금융 지원) 경기 침체로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주민 및 저소득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필요성 증가
  -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유예 등 조치를 강구하고, 주거금융 지원대상도 확대
  
- (부동산산업 혁신) 전세계적으로 프롭테크 등 부동산 융·복합서비스가 지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추세로 정책 추진에 긍정적 동력으로 작용 가능
  - 다만,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조세 증가, 규제 강화 등에 대한 우려 가능성 등은 부정적 정책여건으로 작용
  -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적극적 국회 설득활동을 추진하고,
    - 주요 이슈에 대한 별도 대책은 관계부처와 주기적으로 협의하여 마련

## (1) 주요 내용

## □ 인구 트렌드 변화에 맞춘 생애주기 주거지원망 보완

- 청년·신혼·고령자 등 주거지원 지속확대하고, 1인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주거와 학업·일자리 등을 복합 지원
- 일자리연계형 등 청년 맞춤형대주택 및 문턱제거·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 적용한 고령자 맞춤형대주택 공급 확대

## □ 공적 주택 지속공급 기반 마련

- 3기 신도시 5곳 포함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3차례에 걸쳐 발표하고, 공공주택 지구지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

## (2) 세부 추진계획

## □ 인구 트렌드 변화에 맞춘 생애주기 주거지원망 보완

- (공공임대) '22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 200만호 시대를 열고, '25년에는 240만호까지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착수
- (공공지원) 현재까지 확보한 부지(9.3만호) 등을 활용하여 '25년까지 5만호 입주자모집 추진(임대기간 장기화 등 공공성 강화 지속추진)
- (공공임대) 물량의 50~8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특화 행복주택 단지 입주(의왕고천 8월, 동탄호수공원 12월 등 총 3천호)
  - 신혼부부 인정 범위(현행: 혼인 7년이내 등)에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추가(공특법 시행규칙 등 개정, '20.6월)
    - \* 건설형(2.6만호), 매입형(1.1만호), 임차형(1.2만호)
- (공공지원: 0.3만호) 소규모 정비, 집주인 임대 등 사업방식 다각화

□ **공적 주택 지속공급 기반 마련**

○ 30만호 중 3차 발표 지구 6곳 지구지정 완료 추진

\* 1,2차는 '18년 발표 → '19년 지구지정 / 3차는 '19년 발표 → '20년 지구지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주민설명회·공청회 포함) 및 사전재해영향평가, 환경부·지자체 등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해야 지구지정 可

○ 최초 행정절차인 지구지정(사업구역 및 사업시행자 확정)을 완료하여 30만호 사업의 본궤도 진입 마무리

○ 3기 신도시 홈페이지\*(20.下) 등 공급 가시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진행

\* 사업진행 상황·입주자 모집 계획 소개, 관심지구 알림서비스(신규정보 알림), 맞춤형 주택 추천 등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생애주기별 주택공급)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대학생 기숙사 건립 등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반대, 민간 사업자의 수익저하 우려 등

○ 신규 공공택지구지정 관련 토지소유자,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상이한 이해관계 및 집단행동 등

□ (신규 공공택지구지정) 토지소유자,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상이한 이해관계 및 집단행동 등 예상

○ 포럼·토론회 등 통한 공론화, 선호매체 통한 전방위 맞춤형 홍보 등 활용하여,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1) 주요 내용

## □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 확대

- 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실수요자 우선으로 청약제도를 개편

## □ 거주자 권리 및 편의 강화

- 하자심사분쟁위원회에 재정 권한을 부여하고,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공간을 의무설치시설에 포함

## (2) 세부 추진계획

## □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 확대

- 1인가구 증가, 舊도심 쇠퇴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 주택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늘려 무순위 물량을 줄이고, 우선순위 거주기간 요건을 강화하여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제도 개선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하고,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기준을 구체화하여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

## □ 거주자 권리 및 편의 강화

- 지자체가 하자보수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보수 결과를 관할관청에 통보하고,

※ 위원회와 관할관청간 하자판정·보수결과가 공유되지 않아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미이행 시 다시 민원을 제기해야 하므로 하자보수 지연 초래

- 입주자와 사업주체간 하자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권한\*을 부여

\* 쌍방 간에 합의가 없어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단독으로 결정이 가능하며, 일정요건을 충족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개편) 코로나19로 인한 금리 인하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 수도권 등 중심으로 투기수요 유입 및 시장불안 가능성
-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여 시장으로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



## (1) 주요 내용

## □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조사기구·신고센터를 신설\*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조치
  - \*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감정원 실거래조사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 금조달계획서 관련 실거래 신고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주택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기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자금조달 증빙자료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사항 구체화 등
- 집값담합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모니터링, 전자계약 공공부문 단계적 의무화 등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에 기여

## □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

- 부동산 유형별·지역별·가격대별 공시가격의 불균형으로 인한 조세부담의 역진성, 불균형성 등 문제 해결을 추진
- 최근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장기간 저평가 되어있던 부동산 유형 (단독주택, 토지)과 가격대(고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과감하게 현실화
- 일관된 시세반영률 제고와 불균형성의 근본적 해소 등을 위해 중·장기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의 기본 방향인 로드맵\*을 수립·발표
  - \* 시세반영률 목표치, 목표도달 시기, 시세반영률 제고방식 등을 명확히 제시

## (2) 세부 추진계획

## □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 (조사기구 신설)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부동산 범죄 수사 등 조사·단속활동 전방위 추진

- 부동산 실거래 및 자금출처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등을 총괄하는 전담 조사조직 신설('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 (실거래 신고제도 개선)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기적 수요에 적극 대응
  -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이상거래·불법행위 점검 강화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한 구체화 추진
    - \* 자금제공자의 관계 명시, 금융기관 대출 유형별 세부 구분, 자금 지급수단 작성 등
- (교란행위 근절)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여 설치·운영
  - \* 신고사항 접수 및 상담, 신고내용 확인 및 등록관청 등에 조사요구 등
- (투명성 확보) 공공부문(임대·분양)에 전자계약 체결의무를 도입\*하고, 민간에도 확대할 수 있는 단계적 추진 방안 마련
  - \* 청년·신혼부부 위주로 구성된 행복주택부터 국민·영구 순으로 순차 도입

## □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

- (합리적 현실화) 공시가격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년 공시가격 산정 시 시세 반영률 제고 및 불균형성의 과감한 해소를 추진
  - 특히 고가주택의 낮은 시세반영률, 서민부담 증가 최소화 등을 감안, 9억원 이상 주택의 시세반영률\* 제고를 중점 추진
    - \* 시세별 제고대상 : (9~15억) 현실화율 70% 미만 (15~30억) 75% 미만, (30억~) 80% 미만
- (산정 고도화 및 공개 확대) 정확성 제고를 위한 산정 시스템 개선·검증체계 강화, 기초자료 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을 향상
  - \* ('20) 세종시 대상, 산정 기초자료 시범공개 → ('21~) 대상지역, 공개자료 지속 확대

- (로드맵 수립) 일관된 시세반영률 제고, 불균형성의 근본적 해소 등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발표

\* 시세반영률 목표치, 목표도달 시기, 시세반영률 제고방식 등을 명확히 제시

###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 보유, 거래 등과 관련된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이슈 관리가 필요하며,
  - 특히, 조세·건보료 부담, 과도한 규제 등 이슈에 대한 사실관계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경우 사회적 갈등으로 부상 가능
- 정책 브리핑, 대언론 홍보, 업계 협의 등 적극적 활동을 통해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갈등 소지를 차단
  -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적극적 국회 설득활동을 추진하고,
  - 공시가격 현실화,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별도 대책은 관계부처와 주기적으로 협의하여 마련

기본 방향

-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 “서비스 수준” 제고
  - 보행 접근성 및 정시성이 높은 트램, BRT 등 신규 교통수단을 도입, 대도시권 내 철도를 중심으로 환승·연계교통체계를 확립
- 광역버스 이용편의성 향상
  - 13개 시·도에서 본격 추진(7만명)하고,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예약제 및 증차운행
- 철도속도 상향 본격 추진 및 철도 서비스 확대
  - 15년여 간 정체된 철도속도 상향 본격 추진하고 철도 네트워크를 지속 확충하여 간선·광역기능을 강화
- 철도산업 육성
  - 중소 부품기업의 스케일업(scale-up)과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집약적으로 지원 및 주요국과 철도협력회의 등 해외진출 수주외교 강화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 교통사고 사망자 2천명대 진입 목표 달성을 위해, 종합대책 수립(관계부처 합동), 장애인·고령자 배려 확대, 교통 취약지역 서비스 강화
- 포용적 도로 교통서비스 제공
  - 고속도로(33개)·국도(156개) 총 189개(2,534km) 사업 추진, 도심도 지하도로·사람중심도로 등 미래도로 중장기 계획 수립
  - 주말 여가 활성화, 대중교통 활성화 등 정부 정책에 부합하도록 고속도로 감면·할증제도 개선안 마련·추진

-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안전증진
  - 규제혁신 및 스케일업 지원을 통한 튜닝시장 활성화, 대체부품, 소량생산 등 인증분야 新사업 발굴·육성
  - 중고차 성능점검, 자동차 검사 등 자동차 관리분야 내실화, 리콜 제도 강화, 보험·공제 개선 등 소비자 보호 및 안전 증진
-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 사업 세부 운영방안 마련,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 구성 등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생활물류 산업 육성
  - 코로나19, 사회 메가 트렌드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생활물류(택배, 배달 등)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
- 항공 정책 패러다임 전환
  -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스마트공항 고도화,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활성화, 항공금융 등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 물류산업 체질 개선
  -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화물운송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물류시장 선진화

(1) 주요내용

□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 “서비스 수준” 제고

- 기존 대중교통 수단보다 보행 접근성 및 정시성이 높은 트램, BRT 등 신규 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수단 선택의 폭 확대
- 대도시권 내 거점 지역간 핵심 이동수단인 철도를 중심으로 환승·연계교통체계를 확립하여 편의 대폭 개선

□ 광역버스 이용편의성 향상

- 13개 시·도에서 본격 추진(7만명)하고,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예약제 및 증차운행 등을 통해 이용편의성 향상
  - \* “국민 교통비 30% 절감”을 위한 교통 분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17.7)
  - \*\* ‘광역교통 2030’(‘19.10) 및 ’20년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계획(’20.2)

□ 철도속도 상향 본격 추진

- 국제 경쟁력 강화,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 및 국민 기대 부응 등을 위해 15년여 간 정체된 철도속도 상향 본격 추진

□ 철도 서비스 확대

- 철도 네트워크를 지속 확충하여 간선·광역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는 서비스의 질 향상

□ 철도산업 육성

- 중소 부품기업의 스케일업(scale-up)과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집약적 지원으로 철도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강소기업 육성 도모
  - \* 기업들의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 ‘철도산업 지원방안’ 마련

- 주요국과 철도협력회의, 고위급 면담 등 해외진출 수주외교 강화

####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 교통사고 사망자 2천명대 진입 목표 달성을 위해, 종합대책 수립 (관계부처 합동), 장애인·고령자 배려 확대, 교통 취약지역 서비스 강화

#### □ 포용적 도로 교통서비스 제공

- (간선도로망 확충) 고속도로(33개)·국도(156개) 총 189개(2,534km) 사업 추진, 네트워크 효율화·대심도 지하도로·사람중심도로 등 미래도로 중장기 계획 수립

\*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1~30),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 (통행료 인하) 지역간 형평성(서울외곽), 투자비용 회수(경인선, 울산선) 등을 고려한 합리적 요금체계 개선안 마련 및 통행료 감면·할증제도 개편 추진

#### □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안전증진

- 튜닝 가능 차종 확대, 튜닝성능·안전시험센터 구축, 대체부품 육성 위한 인증지원센터 건립 및 365서비스 확대 등 자동차 관리분야 내실화

- 리콜제도를 강화하고 교환·환불제도 안착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안전 증진

- 음주운전 사고부담 강화, 과실비율체계 개선 등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 □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 (플랫폼 사업 제도화) 버스, 택시 중심의 여객자동차법 체계를 개편하여 새로운 형태의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

- (규제 특례 활성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혁신적 플랫폼 사업자들이 조기에 원활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MaaS) 이용자의 니즈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도시별 시범사업 추진

## □ 생활물류 산업 육성

- 급속히 성장\*하는 생활물류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 근거와 함께 종사자 안전강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생활물류법 제정 추진
- 신도시를 도시첨단물류단지, 로봇·드론배송 등이 구축된 스마트 물류 시범도시로 조성 추진

## □ 항공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생체인식시스템 구축(인천공항), 전자신분증 도입, 이지드롭 서비스 확대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공항 고도화
- 양양·청주·무안공항을 인바운드 유치 시범공항으로 지정, 항공-관광 협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집중 지원
-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드론 특화도시 구현 등 혁신성장 가속화

## □ 물류산업 체질 개선

- 화물차 안전운임제 안착, 택배·배달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프로그램 개발 등 공정한 물류산업 구현,
- 물류산업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화물차 교통안전개선대책 시행 및 물류산업을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지원 강화



## (2) 성과지표

###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19	'24				
① 철도 및 도로 연장 (km)	철도	4,633	4,968	5,335	5,444	5,477	6,133 ('25년)	제3차철도망구축계획('16~'25) * 현재 제4차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중으로 목표치 변경 가능	전국 철도연장 (고속, 광역, 일반, 도시 철도 등 연장) 합산	코레일, 지하철공사 등 각 기관 통계 취합
	도로	18,141	18,415	18,700	18,750	18,797	20,459			
②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 (%)	7.02	6.06	5.89	6.2	6.4	7.00	최근 3년간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이 하향 추세에 있으나, 물류산업 지원정책을 통해 물류활동 부가가치를 향상하여 '24년도 목표치는 도전적인 7.0으로 설정	물류활동 부가가치 / 국내총생산(GDP)	국가물류비 조사 및 산정(한국교통연구원) * 매년 5월 발표	
③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명)	1.9	1.7	1.6	1.4	1.3	0.9	교통안전종합대책('18.1월),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상 목표치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확보	(교통사고 사망자 수 / 자동차 등록대수) × 10,000	경찰청(교통사고) 및 국토부·농림부 등 통계 (자동차·농기계)	

###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19	'20	'21	'22
<b>IV-1. 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b>					
① GTX 거점역사 연계교통 수단 및 환승센터 확대	-	-	5	-	-
② 광역급행버스(M버스) 예약제 서비스 확대	-	8	13	-	-
③ 운행시간 단축	116분	116분	85분	-	-
	300분	300분	150분	-	-
<b>IV-2. 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b>					
①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7.3	6.5	6.0	-	-
②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전년대비 감축률	7.3	6.1	8.0	-	-
③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지급 보험금액(억원)	3,373	2,681	2,412	-	-
<b>IV-3. 교통 플랫폼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을 구현한다.</b>					
① 물류산업 불공정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	-	규칙 개정	-	-
② 새싹기업 신규창업 건수	130	151	160	-	-
③ 항공여객수요 회복(항공여객 운송실적)	1억 17백만명	1억 23백만명	88백만명	-	-

## □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 “서비스 수준” 제고

- 트램, S-BRT 등은 기존 도로(차로 수 감축)를 활용함에 따라, 승용차 이용자 및 버스 운송사업자 등은 교통혼잡을 이유로 반발 예상
- ☞ 우선 신규 도로개설 시 도입을 검토·추진하되, 장기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통행량 감소 등 여건변화에 맞춰 단계적 확대 추진

## □ 광역버스 이용편의성 향상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중교통 수요와 더불어 알뜰교통카드의 이용률 급감
- ☞ 코로나-19 확진세 진정 후 교통비 지출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복귀 유도를 위해 마일리지 지급 확대 방안 검토

## □ 철도 서비스 확대

- 철도건설 사업은 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노선 변경 및 역사 신설, 공사민원 등 갈등요인 상시 내재
- ☞ 주민협의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필요 시 주민 설명회 등 개최

## □ 철도산업 육성

- 올해 초부터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입국 제한, 이동금지 등으로 현지 수주 지원활동에 난항 예상
- ☞ 코로나19 진정 시, 주요국 중심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선제적 인프라사업 투자도 예상되는 만큼, 해외공관 등 유기적 정보 공유

##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이전에 비해 자가용 이동량 증가, 이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
- ☞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지역교통안전협의체 및 민관 합동 교통안전 홍보·협의회 등을 통한 교통안전 대책 및 홍보 등 추진

## □ 포용적 도로 교통서비스 제공

- (대심도 지하도로 기준) 지역주민의 소음·진동 기준강화 요구 및 기준 강화로 인한 공사비·공사난이도 증가 등 이해관계자 간 의견 충돌 예상
  - ☞ 지자체·지역주민·관련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와 요구사항 적극 검토·협의를 통해 기준 마련 추진

## □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안전증진

- 중고차 성능점검 및 검사 분야는 주로 영세업체들로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 체계개선 및 친환경차량에 대한 검사·점검역량 강화 병행 필요
- 리콜제도 강화는 법개정 및 하위법령 구체화 과정에서 관련업계 등의 반발예상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이견 조율 등 충실한 준비 필요

## □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 새로운 서비스·제도 도입에 따른 新-舊 업계 등 갈등 첨예
  - ☞ 갈등관리를 통한 이해관계 조정, 상호간 소통 강화, 기존 사업 규제 개선 및 합리적인 대안 제시 등 新-舊 업계 간 상생 추진

## □ 생활물류 산업 육성

- 신선배송, 반일배송, 예측배송(2시간) 등 생활물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서비스 요구수준도 높아지는 추세
  - \* SNS, 1인 미디어 등 통해 생활물류 서비스 평가가 확대되면서 소비자 목소리 강화되면서, 소비자가 물류산업 중요 구성원으로 부각

## □ 항공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코로나19는 전세계적 현상으로 이동 제약 등 사회·경제활동 전반을 심각하게 제약하여 국내외 항공수요를 모두 잠식
  - 과거 위기 시보다 수요회복에 장시간 소요 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그 영향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 물류산업 체질 개선

- (갈등 복잡화) 新 사업, 융·복합 사업 등장 등으로 신·구 업계 간, 노사 간 분쟁 등 갈등관계 복잡화로 갈등해소에 많은 노력 요구
- 생활물류법은 택배업계, 화물운송업계 반대로 '19년 제정되지 못했고, 화물차 안전운임제도 취소소송이 제기되는 등 업계 반발 심화

## (1) 주요 내용

## □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 “서비스 수준” 제고

- (수단 선택의 폭 확대) 위례트램, 대전도시철도2호선(트램), 성남트램, 대도시권 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건설사업 등 사업 추진
- (철도 역 중심 환승·연계교통체계 확립) 환승편의 제고 및 원도심 활성화 등을 위한 복합환승센터 개발구상, GTX 중심의 연계교통체계 확립

## □ 광역버스 이용편의성 향상

- (광역교통알뜰카드) '19년도 시범사업을 개선하여 '20년 본 사업은 100개 이상 시·군·구, 총 7만 명 규모로 확대 실시
- (광역버스 이용) 출퇴근 시간대 이용수요 집중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버스 예약제 확대 및 증차운행 지원 등 실시

## □ 철도속도 상향 본격 추진

- 400km/h급 고속철도 도입을 위한 설계기준을 최초로 마련하고, 종합 마스터플랜(MP) 수립 및 선도사업(평택~오송 2복선화) 기본계획 반영

## □ 철도 서비스 확대

- 중장기 철도망 구축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호남고속철(2단계) 등 신규 고속철도 건설 적극 추진
  - \* 일반철도, 산단·항만 인입철도, 수도권 광역철도 등 주요 사업도 적기 추진
- 다양한 ‘깨알서비스’를 발굴하여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편의를 적극 개선하고, 對국민 철도이용 서비스의 질을 대폭 향상

## □ 철도산업 육성

- 신규 기술 개발 및 실용화·상용화 등을 위한 국가 R&D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R&D 투자 확대를 위한 신규 과제 지속 발굴
-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및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위한 국제인증 취득지원을 확대하고, 인증 관련 DB 구축 등 추진

## (2) 세부 추진계획

### □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 “서비스 수준” 제고

- (수단 선택의 폭 확대) 위례트램, 대전도시철도2호선(트램), 성남트램\*, 대도시권 내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건설사업 등 사업 추진
  - \* 위례트램·대전2호선(기본계획 수립 중), 성남트램(에타 중)
  - \*\* (광역)수원~구로 BRT, 안양~사당 BRT, (도시)부산 서면~충무 BRT, 서면~사상 BRT
- (철도 역 중심 환승·연계교통체계 확립) 환승편의 제고 및 원도심 활성화 등을 위한 복합환승센터 개발구상, GTX 중심의 연계교통체계 확립
  - 권역별 환승센터 구축전략 마련을 위한 ‘제3차 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

### □ 광역버스 이용편의성 향상

- (광역교통알뜰카드 사업) ‘19년도 시범사업\*을 개선하여 ‘20년 본 사업은 100개 이상 시·군·구, 총 7만 명 규모로 확대 실시
  - \* 경기·인천 등 43개 기초, 2만명 규모로 시행하였으나, 지역 확대·편의성 개선 필요
  - 마일리지를 교통비에 연동하여 차등 인상\*하고, 교통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추가 지급(1회 기준 100~200원↑)하여 체감 효과 향상
    - \* (당초) 250원/800m → (개선) 250원<sup>(2천원 이하)</sup>, 350원<sup>(2천~3천원)</sup>, 450원<sup>(3천원 초과)</sup>/800m
    - \*\* 만 19-34세(청년기본법)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
- (광역버스 이용) 출퇴근 시간대 이용수요 집중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버스 예약제 확대 및 증차운행 지원 등 실시

- 광역버스 좌석공급 확대를 지원하는 **증차운행과 연계한 예약제 도입 노선 확대(8개→13개)**를 통하여 탑승실패, 장시간 정류장 대기 의 불편 해소

## □ 철도속도 상향 본격 추진

- **400km/h 속도 향상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설계 기준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20.8)**

- **중앙선(원주~제천) 시설개량 및 EMU-260(7편성) 최초투입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고속철도 수준으로 향상('20.12)**

\* (일반) 최고속도 : 150km/h, (EMU-260) 최고속도 : 260km/h

- **EMU차량 신규 도입\*과 400km/h급 속도향상 등 철도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중장기 철도운영 세부전략\*\* 수립 추진('20.4)**

\* 준고속 도입 노선 : 강릉선('17 개통), 중앙선('20), 서해선('22), 중부내륙선('22), 경전선('22)

\*\* '중장기 철도운영전략('18.11)'에 따라 실제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 적용기준 등 마련

## □ 철도 서비스 확대

- **중장기 철도망 구축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호남고속철(2단계) 등 신규 고속철도 건설 적극 추진**

\* 일반철도, 산단·항만 인입철도, 수도권 광역철도 등 주요 사업도 적기 추진

- **장래 여건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건설 부분에 편중된 기존계획의 틀을 넘어 운영 및 유지관리 효율성 등 부각**

\* (여건변화) 수축사회(저출산·고령화, 인구↓, 저성장 등), 스마트혁신기술, 글로벌화 등 (사회적 가치) 강한 경제, 포용적 성장, 격차 해소, 안전, 공정, 혁신 성장, 평화 등

- **다양한 '깨알서비스'를 발굴하여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편의를 적극 개선하고, 對국민 철도이용 서비스의 질을 대폭 향상**

- (취약계층 배려) 청각장애인용 수화영상 안내 확대(SRT, '20.12), IT 취약계층 맞춤형 예·발매 시스템 개발, 승강장 고상화('20.12)

- (스마트 서비스 확대) 네이버·카카오 등 대중적 플랫폼을 통해서도 티켓 예·발매가 가능토록 채널을 다변화

- (역사 등 청결관리) 고속철도 대비 노후화된 일반철도 역사와 일반 차량 등 대상 집중적인 위생 및 청결 관리방안 마련('20.6)
- (국민부담 경감) 코로나19로 감소한 수요 회복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할인상품 개발 등 선제적 대책 마련

#### □ 철도산업 육성

- (신규 기술개발) 신규 국가R&D 사업인 철도부품개발사업\*을 착수
  - \* 10개 외산부품 국산화, 5개 미래선도부품 개발, '20.上 사업착수 추진
  - 아울러, 미래선도형 R&D사업에 대한 기획완료 및 예타 신청 ('20.11), 소액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철도R&D 투자확대 도모
  - \* 철도 에너지효율 혁신기술개발('20.上), 데이터기반 철도안전 관리기술개발('20.上), 초고속 하이퍼튜브 철도시스템('20.11), 철도 자율주행시스템 개발('20.11)
- (수주외교 확대) 주요국과 철도협력회의, 고위급 면담, 국제철도 기구 활동 등 국내 철도산업 홍보 및 해외진출을 위한 수주외교 강화
  - \* 터키 고속철도, 인니 LRT 2단계, 페루 메트로, 태국 3개공항 연결 고속철도 등 유망사업 관련 수주외교 추진, 철도협력회의 및 OSJD를 통해 주요국과 협력 강화

###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 “서비스 수준” 제고

- 트램, S-BRT 등은 기존 도로(차로 수 감축)를 활용함에 따라, 승용차 이용자 및 버스 운송사업자 등은 교통혼잡을 이유로 반발 예상
  - ☞ 우선 신규 도로개설 시 도입을 검토·추진\*하되, 장기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통행량 감소 등 여건변화에 맞춰 단계적 확대 추진
  - \* 위례트램(전용 공간 기 확보), 계양·대장 S-BRT(신규도로에 도입) 등
- 철도 역 인근은 도심 거점으로 도로망, 주거·상업지역 등이 형성되어 환승센터, 신규노선 추진 등을 위한 부지 확보 등 개발에 한계



- ☞ 도심 구간은 철도 부지 활용(차량기지 통·폐합, 이전 등), 기존 대중교통수단 개편(S/W) 등 가능한 여건 내에서 이용편의를 개선
- 상대적으로 개발여력이 높고, 도심 진입수요 대비 광역교통 접근성이 낮은 도심 외곽구간은 신규노선 도입 등을 적극 검토

## □ 광역버스 이용편의성 향상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중교통 수요와 더불어 알뜰교통카드의 이용률 급감\*
  - \* 알뜰카드 이용 수(회/인/일) : 1.02회(20.1~23주) → 0.74회(24주~3.1주)로 29% 감소
- ☞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후 교통비 지출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복귀 유도를 위해 마일리지\* 지급 확대 방안 검토
  - \* 대중교통 이용률 감소로 인해 비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
- 충분한 좌석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정보취약계층, 기점부 탑승객 중 예약제 미사용자, 비정기 탑승객 등의 이용불편 우려
  - \* (이용불편 사례) 중간 정류소 탑승예약시 기점부에서는 빈 좌석으로 운행
- ☞ 증차운행 지원, 노선 신설 등 좌석공급 확대와 연계한 예약제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정보취약계층 등의 이용불편 최소화

## □ 철도 서비스 확대

- 철도건설 사업은 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노선 변경 및 역사 신설, 공사민원 등 갈등요인 상시 내재
  -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2천만명이 넘는 수도권 주민들과 일 이용객 100만명의 이동권의 획기적 향상이 가능한 핵심 교통시설
  - 수도권의 약 77% 이상 주민들이 수혜대상인 동시에 이해관계자로 노선, 역 위치 등에 대해 님비(NIMBY) 등 다양한 갈등이 빈번
- ☞ 주민협의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필요 시 주민 설명회 등 개최

○ 열차운행계획 재편 등 서비스 개선 시 지역주민·이용객의 민원 발생, 서비스 향상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인 철도운영사 이견 조율 필요

☞ 관련 민원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운행계획 조정 검토, 철도사업자에게 정책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고 지속 협의

#### □ 철도산업 육성

○ 올해 초부터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입국 제한, 이동금지 등으로 현지 수주 지원활동에 난항 예상

☞ 코로나19 진정 시, 주요국 중심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선제적 인프라 사업 투자도 예상되는 만큼, 해외공관 등 유기적 정보 공유

## (1) 주요 내용

##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 교통사고 사망자 2천명대 진입 목표 달성을 위해, 종합대책 수립 (관계부처 합동), 도심부 제한 속도 하향, 지자체 협업 및 점검·단속 강화
- 교통사각 해소를 위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시설기준 마련, 휠체어 탑승 버스 확대, 농어촌 중형저상버스 도입 등 장애인·고령자 배려 확대
-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내버스 노선 체계 합리화, 벽지 노선 지원 및 공공형 버스 확대 등 교통 취약지역 서비스 강화

## □ 포용적 도로 교통서비스 제공

-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지하고속도로 설계 및 타당성평가 기준 마련 등 기반 구축, 경인지하화·판교-퇴계원·강일-일산 등 시범사업 추진
-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 재정-민자 미연결 구간 분기점 연결, 고속도로-국도 접속부 연결로 확장, 하이패스IC 설치, 환승복합센터 계획 수립
-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배) 통행료 인하, 인천대교·영종대교의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 후 추진방안 결정

## □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안전증진

- (튜닝시장 활성화) 캠핑카로 튜닝 가능한 차종 확대 등 튜닝 범위를 지속 확대 하고 튜닝승인 간소화 및 업계지원을 위한 튜닝성능·안전시험센터 구축 추진
- (新사업 발굴·육성) 대체부품 육성을 위한 인증지원센터 건립, 공동생산을 위한 개발장비 도입 지원 및 소량생산차 활성화를 위한 소량생산기준 완화 추진
- (관리분야 내실화) 중고차 성능점검·보증 체계를 개선하고 친환경차 검사 기준 개선 등 자동차 검사 개선, 365서비스 확대 등 자동차 관리분야 내실화

- (소비자 보호 및 안전증진) 자동차 결함정보 제출 의무화, 손해배상제 도입 등 리콜제도를 강화하고 교환·환불제도 정착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안전 증진
- 음주운전 사고부담 강화, 과실비율체계 개선 등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 (종합대책 수립·추진) 교통사고 취약 분야별(보행자·고령자·이륜차 등) 종합적·맞춤형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수립(관계부처 합동, 4월)
  - \*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상정(국무총리 주재, 4.9)
- (속도 하향)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60→50km/h) 전면시행('21.4월) 이전 연내 조기 정착을 위한 지자체 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홍보 강화
- (노선체계 합리화) 지자체 여건, 수요에 맞는 중복노선 조정, 간선-지선노선 정비 등 시내버스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 마련('20.12. 8개도)

## □ 포용적 도로 교통서비스 제공

-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경인지하화, 판교~퇴계원, 서창~김포, 강일~일산 등 추진
  - \* (경인지하화) 상부공원화 등 추진방안 마련 및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판교~퇴계원, 강일~일산) 사전타당성조사 추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서창김포) 제3차 제안 공고종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20.9) 및 연내 협상 개시
-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 재정-민자 미연결 구간 분기점 연결, 고속도로-국도 접속부 연결로 확장, 하이패스IC 설치, 환승복합센터 계획 수립
  - (하이패스 IC 확충) '25년 100개 확충 목표, '20년 1개 개통, 2개 착공 추진
    - \* 하이패스 IC 현황(누계) : '16년 6개소 → '17년 8개소 → '18년 11개소 → '19년 13개소
    - \* 개통(1) : 서함양(광주대구선), \*\* 착공(2) : 청주흥덕(중부선), 율하(남해2지선)
  - (접속부 개선) 가락IC 등 3개소 연결로 확장 등 기하구조 개선 서해안 조남JCT, 남해2 가락IC(10월 착수), 서울외곽 성남IC(12월 개통)

- (환승복합센터) 하남드림休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 구상안 마련 (‘20.6월), 「수도권 고속도로 환승벨트 구축계획」 수립(‘20.11월)
-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배) 통행료 인하, 인천대교·영종대교의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 후 추진방안 결정
- 민자고속도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도로 안전, 편의시설 등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표준약관(안) 마련 추진

#### □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안전증진

- (튜닝시장 활성화) 캠핑카로 튜닝 가능한 차종 확대\* 등 튜닝 범위를 지속 확대 하고 튜닝승인 간소화\*\* 및 업계지원을 위한 튜닝성능·안전시험센터 구축 추진
  - \* (기존)승합차만 가능→다양한 차종(승용·승합·화물·특수) 허용(‘20.2.28 자관법 시행)
  - \*\*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 등에 대하여 우선 시행하여 튜닝 절차 완화(‘20. 下)
- (대체부품 활성화) 대체부품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대체부품 인증지원 센터\* 건립 및 공동생산 지원을 위한 개발장비 도입\*\*(군산지역)
  - \* (기간) ’18~’22, (사업비) 336억원 \*\* (기간) ’20~’21, (사업비) 150억원
- 인증대체부품 사용 시 보험혜택\*을 택시·렌터카 보험(공제약관)에도 확대 추진
  - \* 일반차 보험의 경우 인증 대체부품 사용시 OEM 가격 25%를 소비자에게 환급
- (대체부품 활성화) 대체부품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대체부품 인증지원 센터\* 건립 및 공동생산 지원을 위한 개발장비 도입\*\*(군산지역)
  - \* (기간) ’18~’22, (사업비) 336억원 \*\* (기간) ’20~’21, (사업비) 150억원
- 인증대체부품 사용 시 보험혜택\*을 택시·렌터카 보험(공제약관)에도 확대 추진
  - \* 일반차 보험의 경우 인증 대체부품 사용시 OEM 가격 25%를 소비자에게 환급
- (소량생산차 활성화) 유럽 등 소량생산 활성화 사례를 검토하여 충돌·충격 시험 등 안전기준관련 항목을 완화\*하고 소량생산 기준\*\* 범위 확대
  - \* 안전도 확인방법, 운행조건 부여, 성능시험대행자를 통한 적합여부 확인 등
  - \*\* 현행 100대 이하인 소량생산 기준을 완화(예시 : 3년간 300대 등)

- (리콜제도 강화) 결함 추정 요건, 결함정보 제출 의무화, 리콜계획 적성성 조사, 손해배상제 도입 등 리콜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20.2월)
- \* 대여·매매용 자동차의 리콜 이행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 및 제공('20.1)

###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이전에 비해 자가용 이동량 증가, 이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
- ☞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지역교통안전협의체 및 민관 합동 교통안전 홍보·협의회 등을 통한 교통안전 대책 및 홍보 등 추진
-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배려
- ☞ 특별 교통수단(전용 콜택시 등) 확대,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중형저상버스 등 배리어 프리 시설 확충 등 추진

#### □ 포용적 도로 교통서비스 제공

- (대심도 지하도로 기준) 지역주민의 소음·진동 기준강화 요구 및 기준강화로 인한 공사비·공사난이도 증가 등 업계 반발 등 이해관계자 간 의견 충돌 예상
- ☞ 지자체·지역주민·관련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와 요구사항 적극 검토·협의를 통해 기준 마련 추진
- (하이패스 IC 설치) 하이패스 IC 설치를 요구하는 지자체는 많으나 설치비용 분담에 반대하는 지자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
- ☞ 고속도로 기능, 부지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 입지를 선정하고, IC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업체계 구축
- (통행료 감면제도 개편) 경차·출퇴근·화물차 할인 및 주말할증 등 기존 수혜자 강한 반발 예상

☞ 공청회·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국민이 수용 가능한 개편안 마련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필요성에 대한 논리 보강

○ (민자 통행료 인하) 민간 사업자의 실질수익률 하락으로 은행·보험사·자산운용사·건설사 등 투자자 반발 예상

☞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 변경을 위해서는 투자자 모두가 동의해야만 가능

#### □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안전증진

○ 중고차 성능점검 및 검사 분야는 주로 영세업체들로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 체계개선 및 친환경차량에 대한 검사·점검역량 강화 병행 필요

○ 신속한 자동차 결함 분석 및 리콜 등을 위한 리콜제도 강화는 법개정 및 하위법령 구체화 과정에서 관련업계 등의 반발예상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이견 조율 등 충실한 준비 필요

## (1) 주요 내용

## □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 업계 간 상생을 위한 기여금 부담 완화,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규제 특례 활성화, MaaS 활성화 등 혁신적 플랫폼 사업 활성화 지원
- 가맹사업 진입장벽 완화, 개인택시 청장년층 유입 지원, 택시 규제 합리화 등 플랫폼과 택시의 고도화된 결합 활성화

## □ 생활물류 산업 육성

- (생활물류법 제정) 생활물류서비스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생활물류시설 지원근거 마련 및 규제완화를 위한 생활물류법 제정
- (도시 물류인프라 확충) 급증하는 생활물류 물동량 처리를 위해 주요 도심 내 및 도심 인근에 배송거점(대형, 중·소형) 확충 추진
- (물류인프라 첨단화) 스마트 물류혁신 R&D(2,600억원, 7년)를 통해 AI 등 첨단기술을 물류산업에 적용
  -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등을 통해 기존 물류창고도 스마트화

## □ 항공 정책 패러다임 전환

- (포스트 코로나19 준비)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스마트공항 고도화,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활성화, 항공금융 등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드론 특화도시 구현 등 혁신성장 가속화 필요

## □ 물류산업 체질 개선

- (안전운임제) 제도 도입 초기, 관련 소송이 제기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과학적 운임분석,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21년 안전운임 결정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등 제도 안착



- (불공정행위 개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시장교란 행위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지입제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
- (물류산업 안전 강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물류산업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물차 교통안전개선대책을 시행
  - \* ① 화물차 과속 방지, ② 노후화물차 관리 강화, ③ 화물차 낙하사고 예방 등
- (친환경 물류산업) 환경오염에 따라 기피 대상이던 물류산업을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책지원 강화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확대 시행

## (2) 세부 추진계획

### □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 (규제 특례 활성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혁신적 플랫폼 사업자들이 조기에 원활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 신청단계에서 사전 컨설팅, 심의단계에서 Fast-Track 등 다방면으로 지원
- (MaaS 활성화) 이용자의 니즈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도시별 시범사업 추진(12월)
  - \* (도심형) 스마트시티 조성과의 연계한 도심형 MaaS 실증사업 추진, 국가시범 도시(세종, '20.12), 혁신성장동력 R&D(대구, '20.10)
  - \*\* (관광형) 문체부('20.1, 문체부 연구 착수), 지자체, 사업자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필요한 제도개선 등 지원
- (기술개발) 통합결제시스템 개발 R&D 추진('18.8~'20.3) 및 상용화를 위한 보완 등 추진('20.10)
  - \* '국가교통체계 혁신기술 R&D('19.11~'20.10, 기획과제)'에 포함하여 보완방안 등 계획 수립 추진

## □ 생활물류 산업 육성

- 급속히 성장\*하는 생활물류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 근거\*와 함께 종사자 안전강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생활물류법 제정 추진
  - \* 기존 「화물자동차법」에서 택배 관련 조항을 분리하고, 퀵·배달대행 등을 추가하여 (가칭) 「생활물류서비스법」 마련
- (대형시설) 수도권 물류 허브 확충을 위해, 중·소업체 공유형 대규모 물류단지 3개소 조성 착수(대외발표 및 개발행위제한, '20.6)
- (중·소형시설) 대형시설 공급에 장기간 소요됨을 고려, 도심 내 공공 부지 위주로 말단 배송거점 시설 확충(관계기관 협약체결, '20.10)
- (해외진출 활성화)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 및 물류 효율화를 위한 '물류전문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발표('20.9)

## □ 항공 정책 패러다임 전환

- (항공업계 지원) 항공업 유동성 공급 및 고용안정 지원 등을 위해 범부처 협의 및 대책 마련·시행(경장·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통해 발표)
  - (생체정보 활용) 승객편의 개선을 위해 신분증 대신 지문·얼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생체인식시스템(출국장 진입→보안검색→탑승구) 구축('20.12, 인천공항)
    - \* 행정기관 보유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법무부·인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업무협약 추진
  - (전자신분증 도입) 국내선 신분증 미소지 승객에 대해 정부24 앱\* 등을 활용한 전자신분증 대체 확인을 위해 규정·절차 마련·시행('20.3)
    - \* 주민등록표(등·초본), 운전자경력증명서 등 전자신분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 (드론특화도시 구축) 비행승인·인증 등 도심 내 드론활용에 큰 제약인 비행 관련 사전규제를 면제할 수 있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운영

## □ 물류산업 체질 개선

- (안전운임제 안착) 안전운임제 운영상황을 모니터링('20.1~)하고, 적정 안전운임 산정을 위해 안전운임위원회 운영('20.7~10)
  - 품목별 원가 및 시장운임을 조사하고, 화주·운수사업자·차주 등이 참여하는 안전운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정 안전운임 공표('20.11)
- (화물차 과속 방지) 화물차 과속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제·조작 차량 제재 강화(「화물법」시행령 개정, '20.9)
- (화물차 낙하사고 예방) 화물 낙하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 종류별로 세부 적재방법을 규정한 '화물차 적재물 안전관리 지침' 마련('20.9)
- (상생협력 강화) 대기업 + 중소기업 간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물류 활동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20.11)
  - \* 대기업(온실가스 관리방안 제시, 기술 이전 등), 중소기업(친환경물류사업 참여)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참여 확대) 대기업-협력기업 동반 평가·관리 등을 통해 중소기업(15개 기업) 참여 유도(협약체결, '20.7)

##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 새로운 서비스·제도 도입에 따른 新-舊 업계 등 갈등 첨예
  - ☞ 갈등관리를 통한 이해관계 조정, 상호간 소통 강화, 기존 사업 규제 개선 및 합리적인 대안 제시 등 新-舊 업계 간 상생 추진

### □ 생활물류 산업 육성

- 비대면 소비 확대 추세에 더해, 코로나19로 중·노년층도 온라인 쇼핑에 새로 진입하면서 택배 등 생활물류 급증\*

\* 최근 3년간 택배 연평균 8.8% 성장, '20.2월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

- 신선배송, 반일배송, 예측배송(2시간) 등 생활물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서비스 요구수준도 높아지는 추세

#### □ 항공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코로나19는 전세계적 현상으로 이동 제약 등 사회·경제활동 전반을 심각하게 제약하여 국내외 항공수요를 모두 잠식
- (드론 기술혁신 제약)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도심 항공교통(UAM) 시대 개척을 위한 美·中·유럽 등 각국의 기술선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 국내적으로도 보안 등 이유로 軍에서 도심 내 드론비행을 대부분 제한하고 테러·사고 등 지역주민 우려도 있어 드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에 제약요소

#### □ 물류산업 체질 개선

- (물류산업 첨단화) 선진 유통·물류기업은 AI·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영역도 개척
  - 우리나라에서도 전통 물류시장에 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여, 화물 운송 시장 효율을 높인 사례가 있으나, 선진국 대비 미흡한 수준
  - \* (물류기술 수준, '18년) 한국 78.5(미국 100), (물류경쟁력, '18년) 25위
- (갈등 복잡화) 新 사업, 융·복합 사업 등장 등으로 신·구 업계 간, 노사 간 분쟁 등 갈등관계 복잡화로 갈등해소에 많은 노력 요구
  - 생활물류법은 택배업계, 화물운송업계 반대로 '19년 제정되지 못했고, 화물차 안전운임제도 취소소송이 제기되는 등 업계 반발 심화
  - 배달, 신선배송 서비스 확대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 열악한 근로조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해결논의는 초기 단계

기 본 방 향

□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보행 위험성 높고, 보행 수요 많은 곳 중심으로 보도설치 구간 확대
- 고속도로·국도에 졸음쉼터, 장거리·새벽 운행 많은 운전자 대상 화물차 라운지 신설 등 졸음운전 예방
- 공모를 통해 지그재그, 교차로 폭 좁힘 등 교통정온화 시설 우수 모델 발굴, 지자체 5030 사업에 활용토록 적극 홍보
- 차로 이탈, 구조물 충격 등으로부터 운전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방호울타리·충격흡수시설 성능 개선
- 도로관리기관의 사고원인조사 대상 확대\* 및 관계기관(경찰·소방) 협력 강화 등 중대사고 분석기반 구축

□ 항공안전 관리체계 개선

-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시행계획 수립·시행
- 효율적인 안전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위한 AI기반 항공안전 빅데이터 구축사업('20년 35억원, ~'24년) 착수
- 항공안전법 개정('19.10)에 따라 '23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항공사의 안전지출·투자내역 공시제도 시범 시행
- 지상조업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간담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상안전 강화 추진계획 마련
- 운항 안전 최우선을 목표로 첨단기술 도입과 관리역량 강화추진

□ 예방적 철도안전체계 구현

- 철도안전 저해요인을 전반적으로 발굴, 종합적인 안전 강화대책 마련
- 노후화된 노선 및 역사 집중개량, 철도역·선로변 및 철도건널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 확충
- 철도역·선로변 및 철도건널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 확충
- 철도안전대책, 및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맞는 체제 정비를 위해 전면 개정 추진
- 해외 의존도가 높고, 중소기업 중심의 취약한 철도차량부품 기술·산업의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 강화
- 철도시설 유지관리 효율성 및 여객 안전성 향상을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시설관리체계 구축
- 스마트기술을 적용한 관제시스템 및 데이터기반 철도안전관리 시스템, 철도차량 이력관리정보망 구축

□ 건설산업 안전성 제고

- 건축·주택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안전관련 권한·책임·절차 등을 일원화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
- 공공공사 작업허가제 의무화, 현장 CCTV 설치 의무화
- 사고다발 건설업체의 경우 고강도 특별점검을 통해 엄중처분
- 부실점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이행강제금 신설) 및 부실점검자 명단공표 세부규정 마련

□ 노후 기반시설 선제적 유지관리 및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20~’25)을 고시(‘20.5)하고, 관리감독기관별(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소관시설 관리계획 수립
- 민·관이 참여하는 기반시설관리협의체를 구성(‘20.11)하여 기반시설 관련 정책을 공유·발굴·확산
- 「건축물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시행규칙 및 세부 점검지침·관리계획 작성 기준 등 마련
- 지자체 건축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소규모 건축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활성화
- 관리자 스스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생애이력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불법자재 유통근절을 위해 유통과정별 감시망 구축, 자재 정보 통합 등 건축자재 품질 혁신방안 마련·추진
- 화재취약건축물 등 성능보강 사업의 대상 건축물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보강방법·기준 등 제시
- 10년 이상 방치건축물의 도시재생·공공임대 연계 등 공공주도 시범사업 추진(‘20.6), 정비 의무화 방안 마련

(1) 주요내용

□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설치 확대,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 확대 및 지방도에도 확대하기 위해 설치·관리지침 제정
- 고속도로·국도에 졸음쉼터, 화물차 라운지 조성하여 졸음운전 예방, 공모를 통해 교통정온화 우수모델 발굴 및 지자체 5030에 활용토록 적극 홍보
- 구조물 노후화에 대비,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기준 등 예방적 관리 체계 도입(제1차('21~'25) 구조물 관리계획 수립)

□ 항공안전 관리체계 개선

- 사후형 안전관리에서 탈피하여 데이터 중심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 사전 예방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 항공사의 자발적 안전노력과 투자유도를 위해 항공교통서비스평가의 항공사 안전성 평가 기준 강화
- GPS 위치오차 개선(17→1~3m)을 통한 항공안전 강화를 위하여 한국형 정밀 위치정보시스템(KASS)을 구축 추진
- 항공정보 통합제공 시스템 개발, 고속·대용량 통신망 구축방안 마련, 관리검사관 역량강화 등 무결점 항행안전 지속 등 항행안전시설 고도화
- 항공사의 자발적인 안전투자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등 자율적 안전관리문화 정착

□ 예방적 철도안전체계 구현

- 현행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철도안전법령을 평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전면개선 추진
- R&D 확대 및 부품기업 육성 등을 통해 철도안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추진



□ 건설산업 안전성 제고

- 작업허가제·안전인증제 도입 및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
- 사고다발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불시점검 비중확대 및 불량자재 퇴출 등 사고예방 활동 강화

□ 노후 기반시설 선제적 유지관리 및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기반시설관리 기본법 시행에 맞춰 기반시설 관리위원회 운영(총리 주재), 기본계획·관리계획·관리기준 수립 등 관리·이행체계 정립
- 「건축물관리법」의 정상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스마트한 건축물 관리 추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통한 지역 안전역량을 강화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19	'24			
㉠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명)	437	499	506	485	428	250 ('22년)	국정목표('17 대비 '22년 사고 사망자 절반감축) 달성을 위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사고사망자 매년 60명씩 감축 필요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승인 통계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19	'20	'21	'22
<b>V-1. OECD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한다.</b>					
㉠ 데이터기반의 항공사 안전목표 관리체계 구축	-	-	안전목표 관리체계 구축	-	-
㉡ 16개 주요 안전장애 감축 목표 달성	-	-	16개 주요 안전장애 발생 67건 이하 달성	-	-
㉢ 인천공항 항행안전시설 17만시간 무중단 운영달성	-	-	달성	-	-
㉣ 철도 운행장애 건수 * 운행거리 1억km당	89.9	135.6	96.6	-	-
<b>V-2. 건설안전의 위협요인을 근절하고 생활환경 안전을 확보한다.</b>					
㉠ 스마트 건설기술 경쟁력 제고	-	65.68%	71.68%	-	-
㉡ 건축물관리 점검자 교육 실적(명)	-	신규	3,000	-	-

###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은 안전시설 설치 이외에 **통행제한속도 감속이 핵심**이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 발생(경찰도 민원 등으로 소극적)
  - ☞ 우수한 사업효과를 통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구간 선정 단계부터 주민·경찰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도로관리기관 중심)으로 적극 설득

#### □ 항공안전 관리체계 개선

-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사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안전증진 정책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투자와 협조 유도에 상당한 애로
  - ☞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항공사와 지속 협의하고 정부의 정책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정부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 추진

#### □ 예방적 철도안전체계 구현

- 철도안전규제는 대부분 법 개정사항으로 **국회 개회 및 합의가 필요**
  - ☞ 국회 의원실 지속 방문하여, 법 개정안 통과 협조 노력

#### □ 노후 기반시설 선제적 유지관리 및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붕괴, 화재 등 각종 건축물 사고 뿐 아니라 불법자재 유통 등으로 건축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상존
  - 또한, 건축물의 수명주기가 늘어남에 따라 건축자재 관리부터 해체까지 전생애주기에 걸친 관리의 중요성 증대
    - ☞ “국민안전” 국정기조에 따라 자재, 기존 건축물 중심의 안전정책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발적 관리,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량도 강화 필요

### (4) 기타

- 철도사고 · 운행장애 통계를 통합 관리하는 ‘**철도안전정보 종합정보 시스템**(www.railsafety.or.kr)’ 구축 · 운영 중(교통안전공단 위탁관리)

## (1) 주요 내용

## □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보행 위험성 높고, 보행 수요 많은 곳 중심으로 보도설치 구간 확대 (전년대비 2배, 32→62개소)하여 보행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
- 차로 이탈, 구조물 충격 등으로부터 운전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방호울타리·충격흡수시설 성능 개선으로 도로안전시설 관리 강화
- 비·눈 등 악천후시 운전자가 20~50% 감속토록 도로관리기관-경찰청간 협력체계 구축, 도로전광표지(VMS) 등으로 운전자에게 감속 안내

## □ 항공안전 관리체계 개선

- 안전데이터, 감독결과 등 수집·분석을 위한 시스템 개발('20.7)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안전감독 시행
- 안전 평가항목을 확대(현행 17종)하고, 평가배점도 상향 추진('20.6)
- 선제적 안전조치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항공기 운항중지 시 공항 주기장 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 위치정보시스템 기반시설(위성임차, 기지국·통신국 등) 단계적 구축, 서비스 제공 및 시설관리, 위치정보 활용촉진 등을 위한 전담조직 설립 등 추진

## □ 예방적 철도안전체계 구현

- 철도차량·시설 등 철도 인프라에 대해 생애주기(Life-cycle)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통합관리 추진
- 또한, 철도차량·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성능기반의 철도인프라 관리 본격화

- R&D 확대 및 부품기업 육성 등을 통해 철도안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추진

## (2) 세부 추진계획

### □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보행자 중심사업) 보행 위험성 높고, 보행 수요 많은 곳 중심으로 보도설치 구간 확대(전년대비 2배, 32→62개소) 추진
- (과속 예방) 공모를 통해 지그재그, 교차로 폭 좁힘 등 교통정온화 시설 우수모델 발굴, 지자체 5030 사업에 활용토록 적극 홍보
  - (과적단속 실효성 제고) 운행제한 단속(축하중 단속, 도로법)시, 경찰(과적 단속, 도로교통법)에 제공하는 과적위반 정보 대상 확대\*(‘20~)
- \* (기존) 적재량 약 10톤 이상(17만대) → (확대) 4.5톤 이상(27만대)
- 차로 이탈, 구조물 충격 등으로부터 운전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방호울타리·충격흡수시설 성능 개선으로 도로안전시설 관리 강화
- 비·눈 등 악천후시 운전자가 20~50% 감속토록 도로관리기관-경찰청간 협력체계 구축, 도로전광표지(VMS) 등으로 운전자에게 감속 안내
- 국민 체감효과가 높고, 안전성이 확보되는 영업소를 선별·집중 투자하여 다차로 하이패스 12개소 추가 구축(누적 27개소)

### □ 항공안전 관리체계 개선

- 안전데이터, 감독결과 등 수집·분석을 위한 시스템 개발(‘20.7)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안전감독 시행
- 안전 위해요인의 사전 발굴 및 개선을 위해 정부와 항공사 간 공동 관리 중인 안전지표를 확대\*(3종 → 20종, ‘20.2.)
  - \* 3종(회항·엔진정지·화재연기) → 20종(유도로 오진입, 착륙조작 미숙 등 17종 추가)

- 항공사의 자율적 안전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안전관련 지출 및 투자 내역 공시 시범시행('20.5~, '23.5월 이후 본격시행)
- 안전 평가항목을 확대(현행 17종)하고, 평가배점도 상향 추진('20.6)
- 선제적 안전조치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항공기 운항중지 시 공항 주기장 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 지상조업사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등 근무환경 개선, 사고발생시 법인 책임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안전한 일터 조성
- 위치정보시스템 기반시설(위성임차, 기지국·통신국 등) 단계적 구축, 서비스 제공 및 시설관리, 위치정보 활용촉진 등을 위한 전담조직 설립 등 추진
- 장애표시등 드론점검 확대,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특별예방기간 운영, 주기적 대응훈련 등 예방중심의 안전체계 강화
-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항공여건을 고려한 항행시설사용료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항공안전 강화사업에 적극 활용

#### □ 예방적 철도안전체계 구현

- 철도차량·시설 등 철도인프라에 대해 생애주기(Life-cycle)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통합관리 추진
- 또한, 철도차량·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성능기반의 철도인프라 관리 본격화
  - (광역철도) 개통된지 오래되고 운행밀도가 높은 수도권 전철 구간의 노후된 전기시설 및 노후 역사 개량 추진
  - (도시철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도시 철도시설의 적기 개량을 위한 국고지원도 지속 추진
- R&D 확대 및 부품기업 육성 등을 통해 철도안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추진

###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은 안전시설 설치 이외에 **통행제한속도 감속이 핵심**이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 발생(경찰도 민원 등으로 소극적)

\* (4차로) 80→60km/h, (2차로) 60→50km/h

- ☞ **우수한 사업효과**를 통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구간 선정 단계부터 주민·경찰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도로관리기관 중심)으로 적극 설득

\* 시행 전 3년 평균 vs 시행 후 1년 효과분석 결과, 교통사고 약 43% 감소(교통研)

#### □ 항공안전 관리체계 개선

- 지속 발생하는 **항공 안전사고**와 증가하고 있는 **드론, 조류충돌**에 의한 안전 위협이 대두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조치 요구

- ☞ 기존공항 안전제고를 위한 **공항시설개선, 항행시설 고도화** 등을 지속 추진하고, **안전관리 검사관 역량강화** 등 사고예방 노력도 강화

#### □ 예방적 철도안전체계 구현

- 종사자의 **책임강화·제재처분 신설** 등 안전규제는 종사자의 책임을 가중시키므로 **철도노조** 등을 중심으로 한 **철도종사자들의 반발**이 예상

- ☞ **노사정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견조정, 갈등해소 도모 (분기 1회 이상)

- 노후시설 개량은, 수요에 비해 예산이 적어, 관련 지자체, 공공기관간 **개량 예산 확보**를 위한 **경쟁 과열** 우려 가능성 상존

- ☞ 전문가 의견수렴 등, **결정체계를** 구축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개량추진**을 도모

### (4) 기타

- 철도사고·운행장애 통계를 통합 관리하는 '**철도안전정보 종합정보 시스템**(www.railsafety.or.kr)'이 구축·운영 중(교통안전공단 위탁관리)

## (1) 주요 내용

## □ 건설산업 안전성 제고

- 작업허가제·안전인증제 도입 및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
- 사고다발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불시점검 비중확대 및 불량자재 퇴출 등 사고예방 활동 강화

## □ 노후 기반시설 선제적 유지관리 및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인프라 총조사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0~'23) 등 데이터 중심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
- 부실점검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3종 시설물 지정누락 방지 및 관리내실화 등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성능위주 설계기법을 도입하고, 불법 건축자재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기존 건축물 화재성능보강 비용지원 확대 등 안전사고 예방체계 구축
- 해체 및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10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의 공사재개 등 정비 의무화 추진으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 (2) 세부 추진계획

## □ 건설산업 안전성 제고

- (작업허가제) 추락대책 후속조치로 공공공사 작업허가제 의무화('19.4)
- (안전인증제)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기계·장비에 한해 작업을 허용하고,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CCTV 설치 의무화('20.9, 시행령 개정)
- (사고예방 강화) 사고다발 공종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현장관리인, 감리 등에게 통보하고, 설계안정성 검토 시 안전관리계획서에도 반영하도록 지침 개정('20.9)

- (점검강화) 불시점검의 비중을 확대(現 20%→30%)하고, 사고다발 건설업체의 경우 고강도 특별점검을 통해 엄중처분(계속)
- (불량자재 퇴출) 불량레미콘 근절을 위해 건설품질관리 적정성 평가주기를 단축(現 3년→2년)하고, 납품승인 거부제 도입('20.6)
- (표준매뉴얼 마련) 굴착공사 시 지하안전을 사전에 평가하는 영향 평가서의 작성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20.6)

\* '18년 요청된 영향평가서 보완요청율 : 98%, 평균 보완기간 : 29.7일

## □ 노후 기반시설 선제적 유지관리 및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총리 주재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20.4)하고, 4개 분과위원회(총괄, 교통, 지하공급, 방재환경) 운영
  - \* 8개 부처(기재·산업·환경·해수·과기정통·국토·농림·행안부)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20명 구성
- (기반시설 기본계획)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20~'25)을 고시('20.5)하고, 관리감독기관별(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소관시설 관리계획 수립
- (유지관리 기술기준)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공통기준을 고시 ('20.4)하고, 15종 기반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기준 수립(관리감독기관)
- (기반시설 대상범위 확대) 열수송관, 통신구 등 공공성이 강한 민간 기반시설까지 관리대상에 포함(기반시설관리법 개정, '20.3)
- (인프라총조사) 15종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관련 정보(노후도, 점검·보수 보장 이력, 예산투입 이력 등)를 총조사하고 표준DB로 구축('20~'23)
-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인프라총조사 결과 DB에 대한 통합관리, 통계분석, 예측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20~'23)

##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 건설산업 안전성 제고

- 70년대 이후 집중 건설된 SOC의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이며 백석역 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제고
  - \*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 약 2천조원 규모의 건설투자 발표 등



- 금년은 기반시설관리법이 시행되는 원년으로, 이행체계의 정립과 데이터 중심의 관리방안 마련 등이 긴급

☞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기본계획·공통기준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입체적 관리 추진

○ 별점제도 개편 등에 대한 업계설득 등 과정 필요

☞ 간담회 등 통해 건설현장 안전도 제고 취지를 설명·설득

○ 스마트턴키 확대과정에서 전기·정보통신공사 업계 반발 가능성

☞ 엄격한 입찰방법 심의를 통해 선도적 사업 중심으로 스마트턴키 사업을 선정해 무분별한 턴키 확대 방지

□ 노후 기반시설 선제적 유지관리 및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건축물관리법」 제정·시행(5.1)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안전점검, 성능보강 및 해체공사 허가제 등 제도도입에 따른 혼선방지 필요

☞ 건축물 관리자·관련 업체·지자체 등에게 점검자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하고,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 실시, 스마트 점검케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계의 부담경감

○ 형식적인 공공건축 업무가 관례화된 발주기관이나 건축사들은 특별법에 규정될 디자인 업무절차에 대한 반대 가능성 상존

☞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에 대한 각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 추진 방향에 대한 설득 및 동참 유도 필요